

발간 등록 번호

11-B190031-000197-08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9 NO. 1



OECD DAC 회원국의 2018년 ODA 실적 및 시사점

OECD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 지원 동향과 대응방안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EDCF 인프라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9년 제1호

한국의 개발협력

발행 : 2019년 7월

발행인 : 은성수

발행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인 : 박종규

주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 : 02-3779-6114(대표)

팩스 : 02-784-1030(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
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국제개발협력 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2018년 ODA 실적 및 시사점 03
(윤소담 한국수출입은행 심사역)

II.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 지원 동향과 대응방안 27
(임소영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67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III. 한국의 개발협력

- EDCF 인프라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101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I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131
(이자호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조사역)
-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149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EDCF

I . 국제개발협력 동향

OECD DAC 회원국의 2018년 ODA 실적 및 시사점
윤소담 한국수출입은행 심사역

OECD DAC 회원국의 2018년 ODA 실적¹⁾ 및 시사점

윤소담
한국수출입은행 심사역

목 차

- I. OECD DAC 회원국의 ODA
 - 1. 2018년 ODA 실적 및 주요 특징
 - 2. DAC 회원국별 ODA 현황
 - 3. 양자 원조
 - 4. 다자 원조
 - II. 우리나라의 ODA
 - 1. 2018년 ODA 실적 및 주요 특징
 - 2. 양자 원조
 - 3. 다자 원조
 - III.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참고문헌

1) 본고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가 2019년 4월 발표한 DAC 회원국의 2018년도 ODA 잠정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DAC 통계 작업반은 직전 연도의 ODA 통계를 3월(잠정), 7월(확정) 두 차례 취합하며, 2018년도 통계 확정치는 '19.12월 발표 예정임.

I . OECD DAC 회원국의 ODA

1. 2018년 ODA 실적 및 주요 특징

□ DAC 회원국(29개국)의 2018년 ODA 규모(증여등가액* 기준)는 1,530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국민총소득 대 ODA 비율(ODA/GNI) 평균은 0.31%

* 2018년부터 ODA 측정방식이 순지출에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자율, 만기 등 차관의 지원조건을 반영하여 ODA 지원액 산정

○ UN 목표치인 ODA/GNI 비율 0.7%를 달성한 국가는 스웨덴 (1.04%), 룩셈부르크(0.98%), 노르웨이(0.94%), 덴마크(0.72%), 영국(0.70%) 등 5개국

□ 양자 원조는 총 1,068억 불로 전체 ODA의 69.8%를, 다자 원조는 총 435억 불로 28.5%를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임시적으로 순지출로 집계*되는 채무구제(2.1억 불), 민간지원수단(24.6억 불)이 ODA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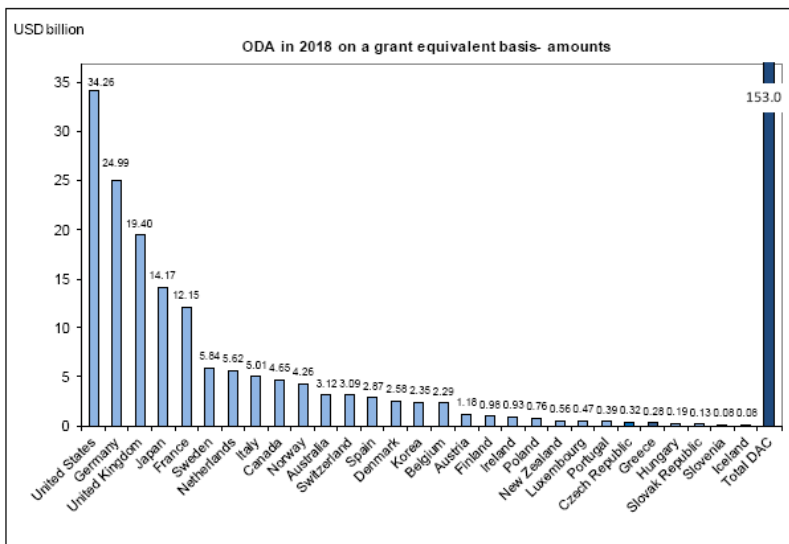
* 채무구제와 민간지원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 이하 PSI)은 증여 등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임시로 순지출로 집계하고 있음

○ PSI는 개도국 민간부문 앞 대출, 출자 등 무상 이외의(non-grant) 지원을 의미하며, 2018년부터 분리하여 발표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순으로 PSI 규모가 컸으며, 자국 개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보고하는 기관중심방식으로 14.7억 불(59.7%), 사업별로 보고하는 수단중심방식으로 9.9억 불(40.3%)이 보고됨.

□ 국가별 지원 규모는 미국(343억 불), 독일(250억 불), 영국(194억 불), 일본(142억 불), 프랑스(122억 불) 순

〈그림 1〉 2018 DAC 회원국의 ODA 현황
단위: 십억 불(증여등가액)



출처: OECD, 'Development aid drops in 2018, especially to neediest countries' (2019.4.10.)

□ 증여등가액 산정에 따라 전체 ODA 규모는 소폭 증가(순지출 1,493억 불 대비 2.5%)했으며, 차관의 회수액 규모와 양허성수준에 따라 국가별 증감 상이

- 과거 지원한 차관의 회수액이 큰 일본은 41% 증가한 반면, 독일 (△3.5%), 프랑스(△3%) 등 저양허성차관 중심 공여국은 감소
- 한편, 한국은 주로 고양허성차관을 지원하고 있으나, 회수액 규모가 작아 증여등가액 산정 시 순지출 대비 2.7% 감소

〈표 1〉 산정방식에 따른 국가별 2018년도 ODA 금액 비교

단위: 백만 불

구 분	순지출 방식	증여등가액 방식	증감(%)
일본	10,063.6	14,167.1	40.8
독일	25,886.5	24,985.1	△3.5
프랑스	12,504.3	12,154.5	△2.8
한국	2,417.1	2,350.8	△2.7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 순지출* 기준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493억 불로 전년 (1,472억 불)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실질가치 기준 2.7% 감소

* 과거 수치와의 비교는 순지출 방식에 기반하며, 앞으로도 과거 통계 수치와의 비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순지출 방식으로도 통계를 지속 수집, 발표할 예정

- 유럽 내 난민 유입은 2015~16년도 최대 규모를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공여국의 난민 지원비용(106억 불)이 크게 감소(전년 대비 $\Delta 28.4\%$)한 것이 ODA 증가를 억제

〈표 2〉 DAC 회원국의 '16~'18년 ODA 변화

단위: 억 불 (순지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양자 원조	1,031.1	1,055.6	1,056.3
무 상	981.8	983.7	968.0
유 상	49.7	65.1	88.3
다자 원조	418.1	416.0	436.9
전 체	1,449.2	1,471.6	1,493.2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PSI와 채무구제는 유상에 포함

2. DAC 회원국별 ODA 현황

- DAC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의 ODA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12개국은 감소
 - 특히 네덜란드(5.8%), 캐나다(5.0%), 스웨덴(4.5%)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탈리아($\Delta 21.3\%$), 일본($\Delta 13.4\%$), 오스트리아($\Delta 11.7\%$), 미국($\Delta 5.0\%$)은 감소
 - ODA 증가의 이유는 다자기구 지원 증가, 자국 DFI 앞 자본금 출자 등이며, 감소는 공여국 내 난민비용 감소, 다자기구 기여금 감소 등에 기인

- 뉴질랜드(25.6%) : 원조 예산 증가
- 네덜란드(5.8%) : 세계은행그룹 지원 증가
- 캐나다(5.0%) : 자국 신규 개발금융기관 자본금 출자 및 다자 기구 지원 증가
- 스웨덴(4.5%) : 다자기구 기여금 증가
- 프랑스(4.4%) : 전반적인 원조 프로그램 지원액 증가
- 호주(3.8%) : 세계은행 앞 기여금 증가
- 영국(1.8%) : 자국 개발금융기관 앞 자본금 출자 및 세계은행 기여금 증가
- 이탈리아(Δ 21.3%) : 공여국 내 난민비용 감소
- 일본(Δ 13.4%) : 다자기구 기여금 감소
- 오스트리아(Δ 11.7%) : 공여국 내 난민비용 감소
- 미국(Δ 5.0%) : 다자기구 기여금 감소
- 스페인(Δ 4.6%) : 채무구제 규모 감소
- 노르웨이(Δ 4.2%) : 공여국 내 난민비용 감소
- 독일(Δ 3.0%) : 공여국 내 난민비용 감소
- 스위스(Δ 2.9%) : 공여국 내 난민비용 감소

○ DAC 회원국 중 EU 국가들의 ODA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실질 증감률 기준 1.2% 감소한 874억 불이나, 공여국내 난민비용을 제외 시 3.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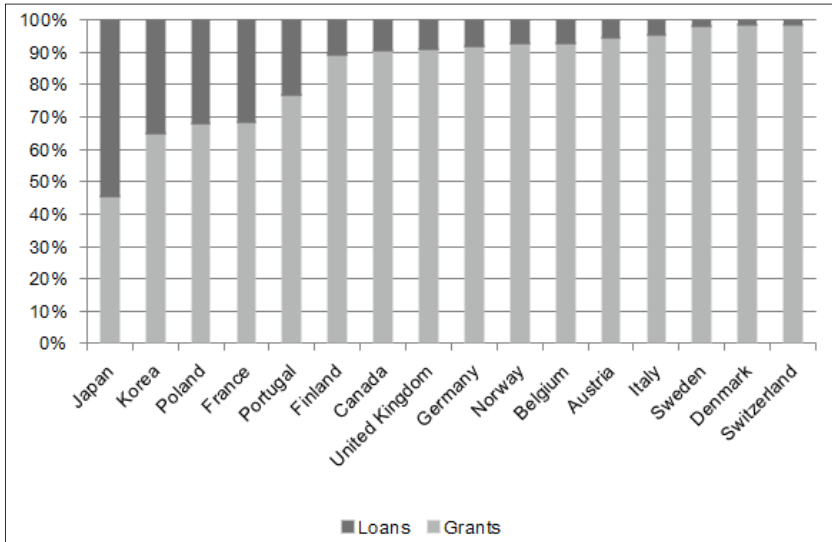
3. 양자 원조

□ 양자 원조는 총 ODA의 약 71.5%이며 이 중 유상원조 비중은 11.6%, 무상원조 비중은 88.4%를 차지(증여등가액 기준)

○ 양자 원조 중 유상원조 비중은 일본(54.4%), 한국(34.8%), 폴란드(32.1%), 프랑스(31.7%) 순

〈그림 2〉 2018년 DAC 회원국의 양자 중 유상원조 비중

단위: % (증여등가액)



출처: OECD, 'Development aid drops in 2018, especially to neediest countries' (2019.4.10.)

□ 원조 유형별로는 프로젝트 원조가 445억 불(42.1%)로 가장 크며, NGO · PPP · 프로그램 원조 199억 불(18.8%), 공여국 내 난민지원 106억 불(10.1%), 행정비용 79억 불(7.5%) 순(순지출 기준)

〈표 3〉 DAC 회원국의 양자 원조 유형별 현황

단위: 억 불 (순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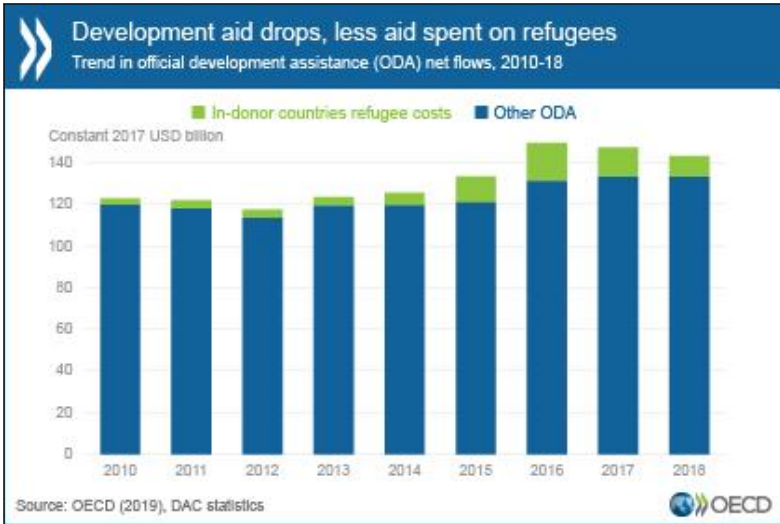
원 조 유 형	2017년		2018년	
예산지원	23.2	(2.2%)	34.4	(3.3%)
NGO, PPP, 프로그램 원조	216.1	(20.5%)	198.5	(18.8%)
프로젝트 원조	519.6	(49.2%)	444.7	(42.1%)
기술협력	55.8	(5.3%)	44.4	(4.2%)
채무구제	4.4	(0.4%)	1.7	(0.2%)
행정비용	75.6	(7.2%)	79.0	(7.5%)
공여국 내 난민지원	141.1	(13.4%)	106.3	(10.1%)
기 타*	19.8	(1.9%)	147.4	(14.0%)
합 계	1,055.6	(100.0%)	1,056.3	(100.0%)

*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비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 공여국 내 난민비용은 106억 불로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크게 줄어 전년 대비(실질 가치) 28.4% 감소하였으며, 양자 ODA의 10.1%를 차지
- 호주, 한국,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26개 회원국들은 공여국 내 난민비용을 ODA로 보고하였으며, 이탈리아(23%), 독일(16%), 캐나다(11%) 등 7개국에서는 난민비용이 전체 ODA의 10% 이상을 차지

〈그림 3〉 DAC 회원국의 공여국 내 난민비용 추이

단위: 십억 불



출처: OECD, 'Development aid drops in 2018, especially to neediest countries' (2019.4.10.)

□ 수원국별로는 아프리카 앞 지원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297억 불, 그 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4.4% 감소한 259억 불을 기록

○ 소득그룹별로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이하 LDCs)*에 대한 지원이 전년 대비 2.7% 감소한 276억 불, 저소득 국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240억 불을 기록하여 빈곤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비중이 다소 감소

* UN은 1인당 GNI와 교육, 보건 관련 인적자원 지표,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해 LDCs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촉구 하고 있음

4. 다자 원조

- 다자 원조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436.9억 불 기록하였으며, 총 ODA 중 29.3%로 전년 대비 1.0%p 소폭 증가(순지출 기준)
 - EU 앞 지원액 비중이 34.8%로 가장 크며, 세계은행 24.0%, UN 15.5%, 지역개발은행 8.7%, 기타 다자기구 17.1% 등으로 구성
 - 세계은행에 대한 지원액이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으며, UN과 EU 지원도 각각 전년 대비 8.4%, 9.1%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은행(△9.6%) 앞 지원액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

〈표 4〉 DAC 회원국의 다자 원조 현황

단위: 억 불 (순지출)

다자기구	2017년		2018년		증감률
U N	62.3	(15.0%)	67.5	(15.5%)	8.4%
E U	139.2	(33.5%)	151.9	(34.8%)	9.1%
세계은행	82.0	(19.7%)	104.9	(24.0%)	27.9%
지역개발은행	42.0	(10.1%)	38.0	(8.7%)	△9.6%
기타	90.4	(21.7%)	74.6	(17.1%)	△17.4%
합 계	416.0	(100.0%)	436.9	(100.0%)	5.0%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II. 우리나라의 ODA

1. 2018년 ODA 실적 및 주요 특징

□ 2018년 ODA 규모(증여등가액 기준)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23.5억 불로, DAC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17년 15위)

○ '18년 국민총소득은 16,189억 불로, ODA/GNI 비율은 전년 대비 0.01%p 증가한 0.15%을 기록하여 DAC 회원국 중 24위('17년 25위)

* 우리나라 ODA/GNI(%) 추이: ('16) 0.16 → ('17) 0.14 → ('18) 0.15

○ 양자 원조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7.3억 불, 다자 원조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6.2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물가와 환율 변동 효과를 제거한 실질가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6.1% 증가

〈표 5〉 2018년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백만 불 (증여등가액)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률(%)	비중(%)
총 ODA (A+B)	2,151.9	2,350.8	9.2	100.0
양자 원조 (A)	1,565.6	1,728.2	10.4	73.5
유상원조(EDCF)	531.6	602.2	13.3	(34.8)
무상원조	1,033.9	1,126.0	8.9	(65.2)
(KOICA)	(561.7)	(617.5)	9.9	(54.8)
다자 원조 (B)	586.3	622.6	6.2	26.5
(한국은행)	(349.0)	(379.8)	8.8	(61.0)
총 ODA(총지출)	2,288.6	2,527.6	10.4	-
GNI(국민총소득)	1,530,522	1,618,900	-	-
ODA/GNI(%)	0.14	0.15	-	-
적용 환율(원/달러)	1,130.64	1,100.19	△2.7	-

* '18.12월 DAC에서 승인된 민간부문지원(PSI) 임시보고방식에 따라 순지출로 보고 되는 PSI 사업 1건 포함(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1백만 불)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홈페이지(<http://oda.edcfkorea.go.kr>) 참고)

□ 한편, 순지출 기준 2018년 ODA 지원규모는 총 24.2억 불로, 전년 (22억 불)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양자 원조는 11.1% 증가, 다자 원조는 6.2% 증가

○ 2018년도 ODA 실적을 산정방식에 따라 비교 시, 증여등가액은 순지출 대비 2.7% 적은 수치

〈표 6〉 산정방식에 따른 2018년도 ODA 금액 비교

단위: 백만 불

구 분	순지출	(비중)	증여등가액	(비중)	증감(%)
ODA (A+B)	2,417.1	(100.0%)	2,350.8	(100.0%)	△2.7
양자 원조 (A)	1,794.5	(74.2%)	1,728.2	(73.5%)	△3.7
유상원조(EDCF)	668.5	(37.3%)	602.2	(34.8%)	△9.9
무상원조	1,126.0	(62.7%)	1,126.0	(65.2%)	-
다자 원조 (B)	622.6	(25.8%)	622.6	(2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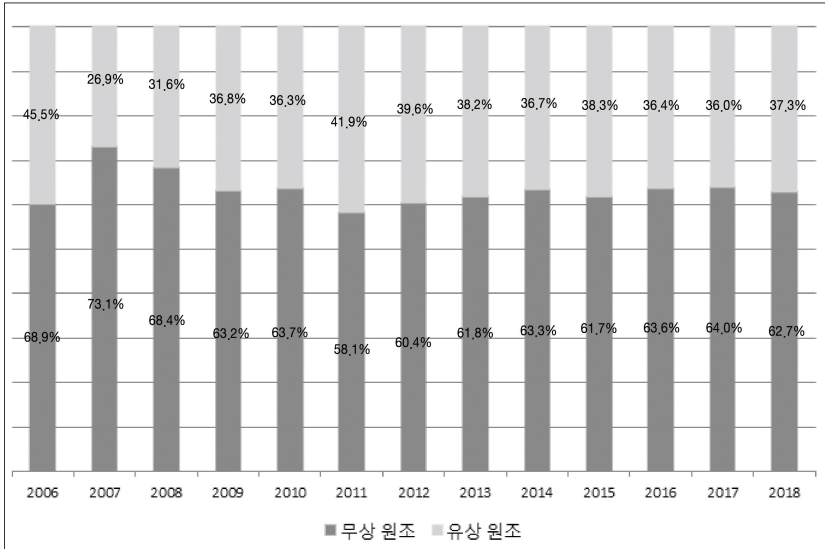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2. 양자 원조

□ 양자 원조 17.9억 불 중 유상원조는 전년 대비 15.0% 증가한 6.7억 불, 무상원조는 8.9% 증가한 11.2억 불 기록

○ 유상원조 비중은 37.3%로 전년 36.0% 대비 1.3% 증가한 반면 무상원조 비중은 62.7%로 소폭 감소

〈그림 4〉 우리나라 양자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 추이(순지출)



출처: 저자 작성 (OECD Statistics 참고)

- 양자 원조의 원조 유형별 배분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양자 원조의 7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협력 12.0%, NGO · PPP · 프로그램 원조 5.8% 등의 순
- 전년 대비 프로젝트 원조가 13.5% 증가하였고 기술협력은 3.6% 증가, NGO · PPP · 프로그램 원조는 0.9% 감소

〈표 7〉 2018년 우리나라 양자 원조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 불 (순지출)

원 조 유 형	2017년	2018년	증감률(%)	비중(%)
예 산 지 원	-	-	-	-
NGO, PPP, 프로그램 원조	105.88	104.95	△0.9	5.8
프로젝트 원조	1,125.73	1,278.18	13.5	71.2
기 술 협 력	207.13	214.66	3.6	12.0
행 정 비 용	81.35	99.96	22.9	5.6
기 타	94.93	96.78	1.9	5.4
합 계	1,615.02	1,794.53	11.1	100.0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양자 원조의 46.4%를 차지하였고, 아프리카 25.7%, 중남미 11.9% 순으로 지원

○ 전년 대비 아시아 비중이 3.7%p 감소한 반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비중이 각각 1.3%p, 1.2%p 증가

〈표 8〉 2018년 우리나라 양자 원조 지역별 현황

단위: 백만 불 (총지출)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미배분	합계
금액	884.09	489.98	226.54	2.26	15.63	286.45	1,904.96
비중(%)	46.4	25.7	11.9	0.1	0.8	15.0	100.0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 분야별로는 경제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양자 원조의 각각 39.6%, 32.9%를 차지

-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원조는 11.3억 불로 에너지 41.7%, 교통 및 물류 39.5%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원조는 9.4억 불로 교육 39.3%, 보건 29.0% 순으로 구성

〈표 9〉 2018년 우리나라 양자 원조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 불 (약정)

사 업 분 야	2018년	비중(%)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1,126.3	39.6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937.0	32.9
생산(산업) 부문	345.8	12.2
다부문	89.7	3.2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 원조	63.1	2.2
인도적 지원	73.2	2.6
공여국의 행정비용	99.9	3.5
기타(미배분 포함)	110.4	3.9
합 계	2,845.4	100.0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과 최빈국(LDCs)에 각각 36.4%, 34.3% 지원했으며, 상위중소득국에 10.0%를 지원
- 최빈국 앞 지원이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OECD DAC 회원국의 지원비중인 18.5%에 비해 양자 원조 중 높은 비중을 차지

3. 다자 원조

- 다자 원조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6.2억 불 기록하였으며, 이 중 UN 앞 출연·출자는 감소하였고,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는 증가

〈표 10〉 2018년 우리나라 다자 원조 현황

단위: 백만 불 (순지출)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액(B-A)
UN	98.5	95.3	△3.3
세계은행	184.5	204.3	19.9
지역개발은행	255.9	273.7	17.8
기타다자기구	47.4	49.3	1.9
합 계	586.3	622.6	36.3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III.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2018년도 지원분부터 ODA 측정방식이 증여등가액으로 변경되어 유무상 비중 및 차관 양허성 등 공여국의 노력 정도가 통계에 반영
 - ODA 차관의 양보다 질에 대한 평가와 개발효과성이 높은 저리 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며, 향후 차관 공여국의 저소득국 앞 고양허성 차관 제공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전망
- PSI 분리 보고에 따라,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과 ODA 민간부문 지원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질 전망

- 정부 앞 차관에 집중되던 ODA가 향후 개도국 민간부문 앞 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재 임시적으로 순지출로 집계되는 PSI의 증여등가액 산정기준과 PSI 사업의 ODA 적격성 검증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
- 우리나라 2018년 ODA는 양자 유무상 및 다자 원조 모두 증가하였으며, 양자 원조와 프로젝트 원조 비중이 증가하고 아시아 지역 집중도가 감소
- 다만, 국민소득 대비 ODA 규모는 낮은 수준으로 2020년 ODA/GNI 비율 0.20%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ODA 확대 노력 필요

- [참 고] 1. DAC 회원국별 ODA 지원 실적 및 ODA/GNI 비율
 2. 우리나라 기관별 ODA 지원 실적

[참고 1] DAC 회원국의 ODA 실적 및 ODA/GNI 비율

단위: 백만 불

국 가	2018년도(증여등가액)		2017년도(순지출)	
	ODA	ODA/GNI(%)	ODA	ODA/GNI(%)
미국	34,261	0.17	34,732	0.18
독일	24,985	0.61	25,005	0.67
영국	19,403	0.70	18,103	0.70
일본	14,167	0.28	11,463	0.23
프랑스	12,155	0.43	11,331	0.43
스웨덴	5,844	1.04	5,563	1.02
네덜란드	5,616	0.61	4,958	0.60
이탈리아	5,005	0.24	5,858	0.30
캐나다	4,655	0.28	4,305	0.26
노르웨이	4,257	0.94	4,125	0.99
호주	3,119	0.23	3,036	0.23
스위스	3,094	0.44	3,138	0.46
스페인	2,874	0.20	2,560	0.19
덴마크	2,582	0.72	2,448	0.74
대한민국	2,351	0.15	2,201	0.14
벨기에	2,294	0.43	2,196	0.45
오스트리아	1,178	0.26	1,251	0.30
핀란드	983	0.36	1,084	0.42
아일랜드	928	0.31	838	0.32
폴란드	763	0.14	679	0.13
뉴질랜드	556	0.28	450	0.23
룩셈부르크	473	0.98	424	1.00
포르투갈	390	0.17	381	0.18
체코	323	0.14	304	0.15
그리스	282	0.13	314	0.16
헝가리	190	0.14	149	0.11
슬로바키아	133	0.13	119	0.13
슬로베니아	83	0.16	76	0.16
아이슬란드	81	0.31	68	0.28
합 계	153,025	0.31	147,160	0.31

출처: 저자 작성(OECD Statistics 참고)

[참고 2] 우리나라 ODA 기관별 지원 실적(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불

기 관 명	2017년			2018년			증감액 (B-A)
	양자간	다자간	총ODA (A)	양자간	다자간	총ODA (B)	
강원도	0.36	-	0.36	0.38	-	0.38	0.02
경기도	3.31	-	3.31	2.74	-	2.74	△0.57
경상남도	0.11	-	0.11	0.09	-	0.09	△0.02
경상북도	3.36	-	3.36	4.63	-	4.63	1.27
경찰청	2.12	-	2.12	2.85	-	2.85	0.73
고용노동부	1.69	4.79	6.48	2.72	4.64	7.36	0.88
공정거래위원회	0.13	-	0.13	0.06		0.06	△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5	1.10	12.25	11.95	1.11	13.06	0.81
관세청	3.55	1.74	5.29	2.87	1.74	4.61	△0.68
광주광역시	0.07	-	0.07	0.07	-	0.07	-
교육부	61.86	-	61.86	60.05	-	60.05	△1.81
교육청	1.50	-	1.50	-	-	-	△1.50
국가보훈처	0.16	-	0.16	-	-	-	△0.16
국무조정실	5.40	-	5.40	8.17	-	8.17	2.77
국민권익위원회	0.07	-	0.07	0.07	-	0.07	-
국방부	1.44	-	1.44	1.60	-	1.60	0.16
국토교통부	10.34	0.14	10.48	9.41	0.13	9.54	△0.94
기상청	2.42	0.06	2.48	2.97	0.06	3.02	0.54
기획재정부	18.45	106.11	124.56	47.54	112.02	159.56	35.00
농림축산식품부	14.70	7.56	22.27	14.92	9.37	24.29	2.02
농촌진흥청	16.38	0.26	16.63	18.79	0.28	19.07	2.44
대검찰청	0.45	-	0.45	0.28	-	0.28	△0.17
대구광역시	0.60	-	0.60	0.55	-	0.55	△0.05
문화재청	2.06	0.08	2.14	2.49	0.01	2.50	0.36
문화체육관광부	9.80	-	9.80	10.99	0.25	11.23	1.43
법무부	0.32	-	0.32	0.33	-	0.33	0.01
보건복지부	20.14	16.83	36.96	27.54	13.65	41.19	4.23

기 관 명	2017년			2018년			증감액 (B-A)
	양자간	다자간	총ODA (A)	양자간	다자간	총ODA (B)	
부산광역시	0.11	-	0.11	0.11	-	0.11	-
산림청	12.10	0.21	12.31	11.57	0.22	11.79	△0.52
산업통상자원부	20.14	1.27	21.41	26.82	1.29	28.10	6.69
서울특별시	1.56	-	1.56	0.83	-	0.83	△0.73
식품의약품안전처	1.49	-	1.49	2.08	-	2.08	0.59
여성가족부	0.83	4.79	5.61	0.86	4.88	5.74	0.13
외교부	172.61	89.11	261.72	142.15	89.75	231.90	△29.82
울산광역시	0.04	-	0.04	0.05	-	0.05	0.01
인사혁신처	17.64	-	17.64	21.53	-	21.53	3.89
인천광역시	2.38	-	2.38	2.43	-	2.43	0.05
제주특별자치도	0.15	-	0.15	0.06	-	0.06	△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7	-	4.27	3.71	-	3.71	△0.56
통계청	1.36	-	1.36	2.27	-	2.27	0.91
특허청	1.47	0.01	1.48	1.31	0.01	1.32	△0.16
한국국제협력단	561.71	-	561.71	617.46	-	617.46	55.75
한국수출입은행	560.72*	-	560.72	637.34	-	637.34	76.62
한국은행	-	348.99	348.99	-	379.84	379.84	30.85
해양수산부	3.89	-	3.89	8.09	-	8.09	4.20
행정안전부	4.92	-	4.92	7.82	-	7.82	2.90
헌법재판소	0.01	-	0.01	0.02	-	0.02	0.01
환경부	6.23	3.27	9.50	7.65	3.35	11.00	1.50
합계	1,565.55	586.33	2,151.88	1,728.21	622.61	2,350.82	198.94

* '18.12월 DAC에서 승인된 민간부문지원(PSI) 임시보고방식에 따라 순지출로 보고되는 PSI 사업 1건 포함(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1백만 불)

출처: 저자 작성(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홈페이지(<http://oda.edcfkorea.go.kr>) 참고)

참고문헌

해외 자료

OECD (2019). Development aid drops in 2018, especially to neediest countries. Paris, France.

OECD (2019). Detailed text on 2018 ODA data. Paris. France.

온라인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9.4.19.~2019.6.10.)

EDCF

II .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OECD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 지원 동향과 대응방안

(임소영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OECD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 지원 동향과 대응방안¹⁾

임소영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목 차

- I. 서론
 - II.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
 - 1.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
 - 2. OECD DAC의 비구속성 권고사항
 - III. OECD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
 - 1. DAC 회원국 전체 양자 ODA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
 - 2. DAC 비구속성 권고 이행 현황
 - IV.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대응하는 선진 공여기관의 대응 사례
 - 1. 일본 JICA
 - 2. 프랑스 AFD
 - 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산업연구원 임소영 연구위원이 총괄, 산업연구원 정선인 연구원, 강지현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함

1. 서론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로 원조를 집행하는 형태의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왜곡하고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는 1990년대 말부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조달을 위한 공개경쟁을 저해하는 법적 및 규제 장벽을 제거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수혜국의 주인정신을 증진할 목적으로 비구속성 원조를 권고하였다.

비구속성 원조는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입찰 시 모든 국가가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원조 방식이다. 단, ODA 통계 지침 상 입찰 자격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인력의 고용 등에 사용한 현지화 소요비용 및 예산지원, 국제수지 재정지원, 채무구제 형태의 지원 금액은 비구속성 금액으로 분류된다. 이와 달리 구속성 원조는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와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원 물자와 기자재,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공여국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조건부 원조를 말한다.

한국은 OECD DAC의 두 차례 동료검토를 통해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 받은 바 있으며, 비구속성 원조 비중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다. 한국 정부는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 등에 대한 비구속성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EDCF 승인액 기준으로 43.5%(17년)인 비구속성 지원 금액을 '20년까지 5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비구속성 원조 확대의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구속성 원조 추진에 따른 국내 원조기관과 사업 수행기관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개발도상국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구속성 원조 지원이 가능한 국가 수가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비구속성 원조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다. 구속성 지원이 불가능한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이하 UMIC)의 비중이 '11년 19%에서 '17년 27%로 증가함으로써 ODA 사업을 비구속성으로 추진해야 하는 제약이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EDCF 사업의 비구속화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마중물로서의 EDCF 역할 제약과 국제경쟁 격화가 예상된다. 개발사업 차관은 주로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해외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DCF는 해외건설 리스크에 취약한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 속에서 해외건설 진출 경험 및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수주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비구속성 사업을 본격화한다면 비구속성 원조 조달은 (i)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글로벌 경쟁입찰, (ii) 수원국 자국조달 기준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에 의한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되면서 해외건설 경험이 적은 우리 중견·중소 건설기업의 입찰참여 및 계약상의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국제계약조건의 법률적 해석 관행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의 경우 계약위험이 커질 수 있다. 비구속성 국제입찰이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때 우리 기업은 국제적 가격경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국내 업체는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가 업체와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ODA 사업의 비구속화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 흐름임에는 명백하지만, 비구속성 원조사업의 수행으로 국내 기업에 피해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의한 국내 관계자들의 리스크 증가 가능성을 이해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경쟁국들의 사업 참여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 개발협력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고는 국제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비구속성 원조 확대 방안에 관한 권고사항들을 검토하고 DAC 회원국들의 현황을 살펴본 후, 비구속성

원조를 실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

1.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화 부족 현상의 발생으로 유럽, 미국, 일본의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 간 수출지원 경쟁이 과열되었다. 공적수출신용의 공정한 운용을 위하여 OECD는 1978년 4월 ‘공적지원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 협약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04년 1월 ‘공적지원수출신용 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년 12월에는 ‘철도산업 부문 수출신용 부문 양해(Sector 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s for Rail Infrastructure)’가 채택되었으며, 2014년 1월 개정된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에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의 기본목적은 수출국이 불공정한 공적수출 신용의 공여를 통하여 수출을 늘려가는 관행을 규제하고, 수출목적물의 가격과 품질에 기초하는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협약의

제1조는 협약의 주요 목적을 공적수출신용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함에 있고, 가장 유리한 공적금융 지원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출되는 물품과 용역의 품질과 가격에 기초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공적지원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규정한다.

동 협약은 4개의 장에 총 69개의 조문과 15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된다. 제1장(총칙)은 협약의 목적, 적용 범위, 부문 양해 등을 포함하고, 제2장은 수출신용의 금융조건으로서 선수금, 최대공정기원 및 현지금융, 최장 상환기간, 보험료율 및 이자율 등을 규정한다. 제3장에서 구속성 원조에 관한 조항이 다루어지며, 제4장은 수출신용 및 무역 관련 원조에 대한 공통절차, 수출신용에 대한 절차, 무역 관련 원조에 대한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는 선박, 핵발전플랜트, 민간항공기 수출신용에 관한 부문 양해와 최저보험료율의 산정 등을 포함한다.

특히 구속성 원조에 관한 제3장은 구속성 원조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자국의 수출 지원을 금지한다. 제3장은 구체적으로 원칙, 구속성 원조 형태, 협조 용자(associated financing), 구속성 원조 적격 국가, 프로젝트 자격 요건, 최소 양허수준, 구속성 원조 적격 기준 예외 사항, 구속성 원조의 양허수준 계상, 구속성 원조 유효기간 등을 다룬다. 이에 따르면, 매년 업데이트되는 세계은행의 국가 분류를 기준으로 상위중소득국(UMIC)에는 구속성 원조를 제공해선 안 되며²⁾, 시장

조건에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도 구속성으로 지원되어선 안 된다.³⁾ 또한, 38조(최소양허수준)에서 수혜국의 양허 수준이 35% 미만이거나,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이면서 양허 수준이 50% 미만인 수혜국에 대해 구속성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2. OECD DAC의 비구속성 권고사항

2001년 OECD DAC은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ODA의 비구속화 권고(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에 합의, 2002년 유엔개발재원회의(UN Conference on Development and Finance)에서 원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OECD DAC은 원조의 비구속화를 권고하면서, 특히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원조를 우선적으로 비구속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2008년에 최빈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채무국도 비구속성 ODA의 대상국으로 추가하는데 동의하였다.

동 권고사항은 가능한 최대치의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 ODA의 비구속화를 공통된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특히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의

2) “There shall be no tied aid to countries whose per capita GNI, according to the World Bank data, is above the upper limit for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36조 a항).”

3) “Tied aid shall not be extended to public or private projects that normally should be commercially viable if financed on market or Arrangement terms(37조 a항).”

경우, 품질, 규모, 방향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ODA의 진행 및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권고사항의 이행으로 인해 이들 국가에 대한 ODA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DAC 회원국 간의 조화된 노력을 성취하는 것도 공통된 목표이다.

이에 따르면, 국제수지와 구조조정 지원, 부채 탕감, 부문별 또는 다 부문 프로그램, 투자관련 프로젝트, 수입현물 지원, 상업서비스 계약 지원, 구매가 따르는 NGO에 대한 ODA, 투자 관련 기술협력 등에 대해 최빈국에 대한 ODA를 비구속화 할 것을 권고한다. 예외적으로 독립적인 기술협력과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비구속화 권고를 제외한다. 이후, 국제사회는 2005년 파리 선언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 증진과 함께 원조의 질 향상을 위해 양자 간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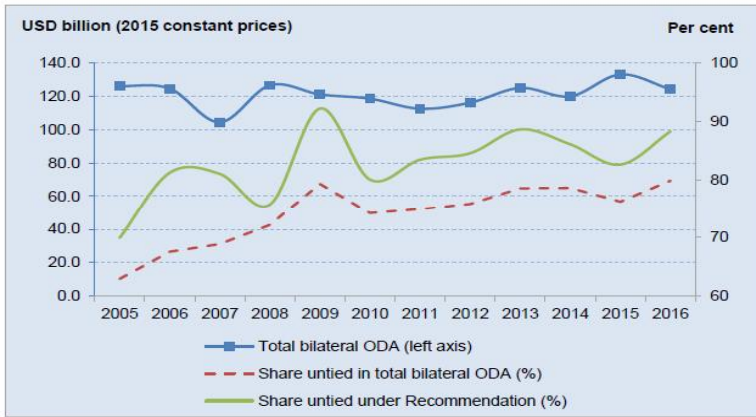
III. OECD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

1. DAC 회원국 전체 양자 ODA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

2018년 ‘DAC 비구속성 권고에 관한 보고서(2018 Report on the DAC Untying Recommendation)’에 따르면,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지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C 회원국 전체 양자 ODA의 비구속성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다소 하락 하였던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고

수치를 기록한 2016년 기준 DAC 회원국의 전체 양자 ODA에서 비구속성 비율은 79.8%를 기록했으며, 이는 DAC 권고가 합의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비구속성 비율이다.

〈그림 1〉 DAC 전체 양자 ODA와 비구속성 비율 추이



출처: OECD (2018b)

DAC 회원국의 전체 양자 ODA 비구속성 비율이 95% 이상인 국가들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이다. 반면 독일, 일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은 최빈국과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비구속성 권고 이행에서는 거의 완전한 비구속성을 보였으나, 전체 양자 ODA의 비구속성에서는 그 수준이 상당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일본(77%)은 전체 양자 ODA 비구속성 면에서 DAC 평균(79.8%)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며 최빈국 및 고채무빈곤국과 전체 양자 ODA 간의 비구속성 정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DAC 회원국의 전체 양자ODA와 비구속성 비율(2014-2016)

국가	양자ODA (백만 불, 2015고정가격)			전체 양자ODA 중 비구속성비율 (%)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ODA 중 비구속성비율 (%)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호주	2,672	2,567	2,115	89	100	100	99.3	100.0	100.0
오스트리아	448	351	445	48	36	52	88.8	84.8	26.9
벨기에	993	1,015	946	97	97	96	100.0	100.0	100.0
캐나다	2,646	3,177	3,437	93	99	96	100.0	100.0	100.0
체코	40	54	49	32	44	46	24.0	44.2	34.2
덴마크	1,420	1,355	992	95	100	99	91.2	100.0	98.4
EU	14,961	19,259	22,442	66	62	72	93.0	84.3	100.0
핀란드	608	479	301	90	93	95	91.9	89.1	94.9
프랑스	6,760	7,838	7,352	92	96	96	97.0	97.2	98.9
독일	14,638	14,109	17,359	84	84	86	99.9	100.0	100.0
아일랜드	431	397	396	98	100	100	100.0	100.0	100.0
이탈리아	543	900	787	94	95	95	97.8	99.4	99.8
일본	14,024	18,934	18,193	78	75	77	100.0	99.6	96.2
한국	2,209	2,246	2,391	53	49	56	58.4	49.1	67.1
룩셈부르크	232	241	263	97	99	99	100.0	100.0	100.0
네덜란드	2,343	3,461	2,568	98	93	99	97.9	97.1	99.7
뉴질랜드	424	323	317	82	85	85	97.9	98.7	98.7
노르웨이	2,813	3,070	2,568	100	100	100	100.0	100.0	100.0
폴란드	87	115	175	31	34	34	3.1	3.6	2.0
포르투갈	230	170	144	34	49	59	31.7	38.9	55.4
스페인	626	567	2,772	84	81	82	95.5	82.4	98.6
스웨덴	2,523	1,722	2,235	86	87	96	99.0	95.1	99.6
스위스	2,492	1,993	1,629	94	95	94	100.0	100.0	100.0
영국	5,827	7,502	7,463	100	100	100	100.0	100.0	100.0
미국	25,326	26,681	26,559	62	56	65	68.3	58.3	68.5
전체	105,380	118,627	124,025	78	76	80	86.0	82.6	88.3

출처: OECD (2018b)

주: 공여국의 행정 비용, 공여국 내 난민 비용 제외

보고서는 2015-2016년 기간에 한국의 전체 양자 ODA의 비구속성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48.7%→56%)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비구속성 정도는 여전히 DAC 평균(79.8%)에서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내면서 타 선진공여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다 양자 ODA 비구속성 비율이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53%), 오스트리아(53%), 체코(46%), 폴란드(34%) 등 4개국뿐이다. 이 외에도 DAC 평균 수치에 달하지 못하는 국가는 일본(77%), 미국(65%), 슬로바키아(53%), 포르투갈(59%)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EDCF의 비구속성 실적은 더 저조하다. 통계 분류상 현지화 소요비용을 포함한 비구속성 금액 지원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43.5%이다.

〈표 2〉 최근 5년간 EDCF 비구속성 지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구속성 금액 비율	47.2%	47.8%	44.2%	52.2%	43.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2. DAC 비구속성 권고 이행 현황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DAC의 비구속성 권고에 따라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ODA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비구속성 원조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DAC 회원국의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ODA 비구속성 비율은 88.3%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2009년 92.6%, 2013년 88.6%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특히 EU와 미국의 비구속성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U는 새로운 금융 규제가 발효됨에 따라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전 원조수단이 비구속화 되어 2015년 84.3%에서 2016년 100%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5년 58.3%로 하락한 후 2016년 68.5%로 증가했으나 이는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며 DAC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DAC 평균 이하의 비율을 보이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가 95%를 넘는 높은 수준의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를 이행하고 있다. 2016년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 대상의 ODA 비구속성을 완전히 달성한 국가들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EU,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 12개국이다. 이 외에도 덴마크(98.4%), 핀란드(94.9%), 프랑스(98.9%), 이탈리아(99.8%), 일본(96.2%), 네덜란드(99.7%), 뉴질랜드(98.7%), 슬로바키아(98.2%), 스페인(98.6%), 스웨덴(99.6%) 등은 높은 수준의 비구속성 비율을 이행하고 있다.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한국의 비구속성 비율은 2016년 67.1%로 전년 49.1%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DAC 평균(88.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DAC 평균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비율 이하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총 6개국으로 오스트리아(26.9%), 체코(34.2%), 폴란드(2%), 포르투갈(55.4%), 미국(68.5%)이다. 통계수치가 없는 그리스, 헝가리는 제외하였다. 한국

보다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ODA 비구속성 정도가 낮은 DAC 회원국은 단 4개국⁴⁾인 실정으로 한국은 DAC 권고사항 달성을 위해 낮은 비구속성 제고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V.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대응하는 선진 공여기관의 대응 사례

1. 일본 JICA

일본은 원조정책, 추진체계, 원조 유형 및 포트폴리오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 ODA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조의 구속성 정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2016년 양자 ODA의 비구속성 비율(77%)은 OECD 평균 이하이나 최빈국과 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ODA 측면에서 우수한 수준(96.2%)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일본은 비구속성 ODA 추진에 따른 자국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찰과 조달 과정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명시하거나 자국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리 등에 우대를 제공하는 차관을 명시적으로 구속성으로 운용하는 등 자국 기업의 수주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본 절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프로젝트 수준에서 살펴보고,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대표적 사례인 경제협력특별조건

4) 포르투갈(55.4%), 체코(34.2%), 오스트리아(26.9%), 폴란드(2%)이며 통계수치가 없는 그리스, 헝가리는 제외함.

(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이하 STEP) 차관의 주요 지원대상, 분야, 조건 등을 심층 분석한다.

(1) 일본 비구속성 차관사업 개요

일본은 회계연도 2010-2017년 동안 443개 차관사업에 대하여 10조 1억 2,900만 엔을 지원했으며, 이 중 비구속성 원조사업은 362개로 총 7조 2,974억 300만 엔에 달한다. 비구속성 사업 비중은 사업 건수 면에서는 전체의 81.7%를 차지하나 금액을 기준으로는 전체의 73.0%로 하락한다.

〈표 3〉 일본의 차관사업 구속여부별 비중(2010-2017)

구분	기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구속	사업 수	84.6%	79.7%	76.4%	86.0%	82.4%	70.6%	89.1%	88.5%
	금액	78.3%	75.1%	57.9%	83.9%	67.1%	56.8%	88.8%	81.7%
구속	사업 수	15.4%	20.3%	16.4%	12.0%	11.8%	23.5%	7.8%	7.7%
	금액	21.7%	24.9%	24.5%	11.7%	11.9%	42.2%	7.1%	17.2%
기타**	사업 수	0.0%	0.0%	7.3%	2.0%	5.9%	5.9%	3.1%	3.8%
	금액	0.0%	0.0%	17.6%	4.4%	21.0%	1.0%	4.1%	1.1%

출처: JIC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 일본 회계연도(4.1-3.31)를 기준으로 계산

** 기타는 구속성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임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차관사업 중 특히 대규모 사업에서 일본기업의 수주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JICA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본 사업의 경우 10억 엔 이상,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1억 엔 이상의 발주 건에 대한 계약자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10억 엔 이상의 본사업에 대한 발주는 265건, 3조 4,618억 4,700만 엔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일본기업이 참여한 계약은 총 97건으로 전체의 36.6%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2조 2,602억 3,200만 엔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한다. 이 때, 대규모 사업의 일본기업 수주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500억 엔 이상의 발주 10건 중 일본기업이 참여한 계약은 8건이다.

(2) 자국 기업의 ODA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JICA는 현지 정부 및 발주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일본기업에 유리하도록 입찰조건 및 사업 내용을 설계함으로써, 일본기업이 주 계약자 또는 공급업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과의 협업 없이는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가. 일본기업에 유리한 입찰조건 설계

JICA 차관사업은 일본기업에 유리하도록 일본업체만 보유한 실적, 기술 등을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일본기업 외 타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예를 들어, 미얀마 교량공사 사업 입찰 시, 입찰 초청장 내용이 일본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한국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한 컨설턴트

국제입찰 시, 일본 ODA사업 실적 등 일본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여 한국기업이 이를 검토 후 불참 결정한 사례도 있다.

나. 일본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사업 설계

사업 구성 요소로서 일본기업만 생산하는 기자재를 명시하거나 일본이 가진 특허기술, 공법 등으로 사업 내용을 설계하여 일본기업이 주계약기업으로 사업을 수주하지 않을 시에도 일본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한다. 즉, 사업의 필수 핵심자재를 일본기업의 특정 제품을 활용하도록 사업 내용을 설계하여 수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기업이 핵심 공급업체로 참여하도록 한다. 일본의 특정 기업만이 생산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기업과의 협상 시에도 유리한 가격 및 조건 확보가 가능하다.

뭄바이 해상교량사업이 좋은 사례이다. 본사업 계약은 대우건설-타타프로젝트에서 수주하였으나, 일본의 JFE 엔지니어링의 강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어 JFE 엔지니어링을 공급업체로 참여시켰다. JFE 엔지니어링은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이하 RFP)에서 명시한 핵심자재의 조건이 충족된 제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 자국기업 컨설턴트를 통한 본사업 설계

일본기업이 컨설팅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여 일본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본사업을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 컨설턴트는 사업 설계, 기술 사양, 입찰문서 등을 준비하고, 일괄도급(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EPC) 선정과정, 건설, 감독, 환경적 요인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본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JICA의 경우 컨설팅서비스의 대다수를 일본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1억 엔 이상의 컨설팅서비스 발주 114건 중 일본기업이 계약자로 참여한 건은 93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율이 더 증가하여 전체 1,948억 5,100만 엔 중 일본기업이 참여한 건은 1,841억 7,600만 엔으로 94.5%에 해당한다.

특히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본사업 계약 건 중 일본기업의 컨설팅 사업 수주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10억 엔 이상의 본사업 발주건 중 일본기업이 계약자로 참여한 건은 97개, 2조 2,602억 3,200만 엔에 달한다. 이 중 컨설턴트 정보가 공개된 86건 중 일본기업이 컨설턴트로 수행한 사업 비중은 건수 기준 95.3%, 금액 기준 99.5%에 달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일본 컨설턴트를 통해 일본기업의 본사업 수주가 유리하도록 입찰조건, 사업 내용 등을 설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JICA 컨설팅 사업 수주 현황(2015-2017)

	JICA 컨설팅 사업 수주*				일본기업이 수주한 사업 중 일본컨설턴트가 설계한 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	(비중)	(백만 엔)	(비중)	(개)	(비중)	(백만 엔)	(비중)
일본 기업	93	81.6%	184,176	94.5%	82	95.3%	2,099,728	99.5%
비일본 기업	21	18.4%	10,675	5.5%	4	4.7%	10,600	0.5%
합계	114	100%	194,851	100%	86	100%	2,110,328	100%

출처: JIC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 1억 엔 이상의 발주건만 포함

** 일본기업이 수주한 97건 사업들 중 컨설턴트 정보가 없는 11건은 제외

(3) 주요 차관사업 사례

가. 인도 뭄바이 해상교량 건설 프로젝트(Mumbai Trans-Harbour Link Project)

〈표 5〉 JICA 인도 뭄바이 해상교량 건설 프로젝트 개요

사업명	Mumbai Trans-Harbour Link Project
섹터/ 세부섹터	교통/도로
차관 계약일	2017.3.31.
대상국/ 이행기관	인도 뭄바이광역개발청 (Mumbai Metropolitan Region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MMRDA)
수주기업	IHI Infrastructure Systems (일본) - Larsen&Toubro (인도) 컨소시엄
계약금	1,293억 3,100만 엔

출처: MMRDA 웹사이트(<https://mmrda.maharashtra.gov.in/mthl#>)

본 사업은 총 3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패키지별로 시공사를 선정하였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구간(총 18.2km)인 패키지 1·2에 전체 공사비의 80% 이상이 투입되고, 패키지3은 육상 연결 구간으로 공사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⁵⁾

〈그림 2〉 JICA 뭄바이 해상교량 건설사업 패키지 구성



출처: MMRDA 웹사이트(<https://mmrda.maharashtra.gov.in/mthl#>)

인도 정부 차원의 우선순위 사업을 JICA 차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일부 내용의 추가 및 수정을 제안하였다. 2016년 JICA와 인도 주정부 간 차관 협의 과정에서 JICA의 2개 차선 추가, 기존의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계획된 교량의 4km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구조물로만 건설 등의 제안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였다.⁶⁾

5) 패키지1은 일본의 IHI Infrastructure Systems(일본) - Larsen&Toubro(인도) 컨소시엄이, 패키지2는 대우건설과 인도 TATA Project가 구성한 조인트벤처가, 패키지3은 Larsen & Toubro가 수주함.

6) As per the Japanese standards and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bridges, JICA recommended provision of 2.5 meters wide shoulder on outer side of each carriageway and 0.75m at central median. Specialised steel will be imported from Japan for fabrication.

발주처는 2016년 11월 AECOM Asia Co Ltd. (홍콩), Padeco Co., Ltd. (일본), Dar Al-Handsah (레바논), TY Lin International (미국)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일반 컨설턴트로 선정하였다.⁷⁾ 선정된 컨설턴트는 예비설계(preliminary design), 건설 계획, 프로젝트 견적, 프로젝트 수행 계획, 경제·금융 분석 등을 포함하는 준비조사(Preparatory survey)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컨설턴트는 입찰 사전 미팅, 입찰문서 검토,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허가 확보, 컨셉디자인 검토, 프로젝트 건설 모니터링, 질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사업 내용을 큰 틀에서 기획할 수 있었다.

본사업 시공사인 EPC 선정을 위한 입찰은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었다.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오픈되었으나 주요 사업은 일본과 한국 기업이 수주하였다.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MMRDA는 현지에서 공고를 통해 기업들의 참가의향서를 모집하였다. 기업이 제출한 참가의향서를 바탕으로 29개사에 대하여 RFP를 송부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MMRDA는 이들 중 10개 후보 기업(패키지 1, 2는 각각 4개사, 패키지 3은 2개사)을 선정하였다. 유력 업체로 거론됐던 중국철도그룹 자회사인 중국철로 특대교량공정그룹(China Railway Major Bridge Engineering Group Co.)이 안보 문제로 입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한-일간 경쟁구도로 압축되었다. 가격 개봉 후 최저가를 제안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7)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55633793.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원칙에 따라, 패키지 1은 일본 IHI 인프라시스템-인도 L&T 컨소시엄이, 패키지 2는 대우건설-타타프로젝트 JV가 최종 낙찰되었다.⁸⁾

JICA는 수원국 정부 및 발주처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 내용에 깊게 관여함으로써 사업 내용, 계약조건 등에서 자국기업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동 사업에서도 JICA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뭄바이 해상교량의 핵심자재를 일본기업의 특정 자재를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사업 내용을 설계하여 자국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처 RFP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강재는 일본 JFE 엔지니어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유일하다. 따라서 JFE 엔지니어링은 모든 입찰자에 가격 등을 포함하는 계약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따라서 현지 또는 외국사에서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일본기업은 좋은 조건으로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나.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Matarbari Ultra Super Critical Coal-Fired Power Project)

〈표 6〉 JICA 방글라데시 마타아라비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사업명	Matarbari Ultra Super Critical Coal-Fired Power Project
섹터/ 세부섹터	전력 및 가스/발전소

8) <https://www.livemint.com/Politics/3Gh1qc4pRnTE2mmzGKAVAO/MMRDA-receives-17-bids-for-Mumbai-Trans-Harbour-Link-project.html>.

차관 계약일	2014.6.16.
대상국/ 이행기관	방글라데시 석탄발전공사 (Coal Power Generation Company Bangladesh Limited, 이하 CPGCBL)
수주기업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도시바-스미토모상사 컨소시엄
계약금	6,385억 8,200만 엔

출처: CPGCBL (2017), Annual Report 2015-16

동 사업은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지역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와 항구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발전소와 항구 사업을 구분하여 별도 발주하였다. 발전소 건설사업 외 별도 발주된 항구 건설사업도 일본기업⁹⁾이 수주하였다. 추후 포스코건설은 주계약자인 스미토모상사의 시공업체로 발전소 토목공사, 석탄 원료처리설비, 부대설비 등의 공사(8억 4천만 불)를 수주하였으며, 현대건설은 항구 건설사업의 주계약자인 펜타오션건설로부터 항로준설, 매립 및 지반개량을 위한 부지조성공사(5억 9천만 불)를 수주하였다.¹⁰⁾

동 사업의 설계를 위해 JICA와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이 마타바리 지역 발전소 관련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¹¹⁾ 이후, 두 개의 일본기업과 독일기업, 호주기업으로 구성된 조인트벤처¹²⁾가 컨설턴트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발전소 설계, 기술

9) 펜타오션건설(Penta Ocean Construction CO., LTD.), 계약금: 77억 7,800만 엔

10) <http://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05>

11) <http://www.theindependentbd.com/printversion/details/33067>

12) Tokyo Electric Power Services Company Ltd (일본), Nippon Koei Company Ltd (일본), Fichtner GmbH & Company KG (독일), SMEC International (호주)

사양, 입찰문서 등을 준비하고, EPC 선정과정, 건설, 감독, 환경 요인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¹³⁾

JICA와 CPGCBL은 프로젝트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EPC 계약 패키지를 (i) 준비공사(Procurement of Preparatory Work)와 (ii) 발전소 및 항구 건설 공사(Procurement of Main Work)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펜타오션건설(Penta-Oceans Construction CO., Ltd.)이 준비공사 업체로 선정되었다.¹⁴⁾ 또한, CGCBL는 기업의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바탕으로 자격에 부합하는 두 개사¹⁵⁾를 선발(short listed)하고 JICA에 그 결과를 송부하였으며¹⁶⁾, 상기 두 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하였다.¹⁷⁾ 기술평가위원회(Technical Evaluation Committee: TEC)는 스미토모사를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자로 추천했으며¹⁸⁾ 발주처는 JICA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스미토모상사-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도시바 컨소시엄을 EPC 업체로 최종 낙찰하였다.

13) <https://www.thedailystar.net/matarbari-power-project-appoints-consultant-58896>,
<https://www.dhakatribune.com/uncategorized/2015/01/07/deal-inked-for-matarbari-power-plant-consultancy-services>

14) <https://www.jica.go.jp/bangladesh/english/office/topics/speech160214.html>

15) 스미토모상사(Sumitomo Corporation) 컨소시엄, 마루베니상사(Marubeni Corporation) 컨소시엄

16) <http://www.theindependentbd.com/printversion/details/33067>

17) JICA와 발주처 간의 차관 계약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일본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 문구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방글라데시 미디어 The Daily Observer의 2017.5.15.일자 기사 중, "however, as per agreement only Japanese companies were eligible to submit document here", http://www.observerbd.com/details.php?id=73642&fb_comment_id=1320678108051407_1623044447814770).

18) http://www.observerbd.com/details.php?id=73642&fb_comment_id=1320678108051407_1623044447814770

JICA는 해당 사업을 일본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수원국 정부와의 차관 계약 협의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본이 강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였다. 즉,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는 일본이 우수한 기술을 가진 분야 중 하나이며, 일본의 카시마항을 모델로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일본기업이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입찰참여자에 대한 요구사항에 일본 ODA 차관사업¹⁹⁾, JICA 지침에 따른 사업²⁰⁾ 등의 경험을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일본기업이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을 특정하였다.

(4) 비구속성 원칙하에 구속성 지원에 관한 제도 운용

일본은 비구속성 원조를 원칙으로 하면서 별도의 구속성 지원 제도 운용을 통하여 자국 기업의 참여를 일부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활용하는 구속성 사업에 대하여 금리, 상환 기간 등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제협력특별조건(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이하 STEP) 제도이다. 일본은 2002년 7월, 일본기업의 노하우와 첨단기술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일본과 수혜국 간 일본 ODA의 가시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STEP 차관을 도입하였다.

19) "have experience in Japanese ODA Loan funded projects".

20) "Experience i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EMP), Environmental Monitoring Plan (EMoP) and/or Resettlement Action Plan (RAP) as per World Bank or Asian Development Bank or JICA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ECD 규정 하, 일본의 엔차관과 구속성 원조에 대한 자격을 갖춘 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에 대하여 STEP 지원이 가능하며, 엔차관 조건에 따라 최빈국 또는 중고소득국의 소득범주에 속하는 국가는 제외한다. 이자율 및 상환 기간은 비구속 원조에 대한 OECD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제공하며, 비구속 원조 차관 대비 수원국에 유리하게 이자율과 상환 기간 등이 제공된다.

STEP 재원 사업은 일본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일정 부분 이상을 일본 제품 및 일본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i) 일본기업, (ii) 일본기업과 수혜국 기업으로 구성된 조인트벤처, (iii) 해외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회사인 경우에만 주계약자로 가능하며, 사업 내용 면에서는 총 계약금액의 30% 이상이 일본 제품이거나 일본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조달되어야 한다.

〈표 7〉 STEP 차관사업 조달 조건

구분	주계약자	조건
제품 및 서비스	일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 등록된 법인 - 일본 내 적절한 생산 또는 공급 시설 보유 - 실제로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
	조인트벤처 (일본기업 + 수혜국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 기업(lead partner)은 일본기업 - 일본기업이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 점유 - 수혜국 기업: 수혜국 또는 일본에 등록된 법인, 수혜국 또는 일본 내 적절한 생산 및 공급 시설 보유, 수혜국 또는 일본에서 실제로 운영
	일본기업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기업(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재무제표가 포함되도록 요구받는 자회사 - 위치 국가에 법인으로 등록 - 위치 국가 내 적절한 생산 또는 공급 시설 보유 - 위치한 국가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

구분	주계약자	조건
자문 서비스	일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대부분을 일본 국민이 소유 - 상근 이사 중 대다수가 일본 국민 - 일본에 등록된 법인
	조인트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 기업(lead partner)은 일본기업 - 일본기업이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 점유 - 일본기업 외 파트너: 주식 대부분을 수혜국 또는 일본 국민이 보유, 상근 이사의 대부분이 수혜국 또는 일본 국민, 수혜국 또는 일본에 등록된 법인

출처 : JICA 홈페이지

일본으로부터의 조달 비율 계산은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상품의 경우에는 최종조립(기계 등의 경우) 또는 최종 정제/프로세싱(자재 등의 경우)이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외 일본기업이 투자한 수혜국의 제조업자, 개도국의 제조업자, 선진국에 위치한 일본기업의 자회사의 경우 다음의 세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포함한다.

먼저, 일본기업이 투자한 수혜국 내 제조사로서 제조사의 지분 10% 이상을 한 개의 일본기업이 보유해야 하며, 일본기업의 지분의 비중은 제3국의 기업의 비중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또한, 해당 제조사는 수혜국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수혜국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일본기업이 투자한 개도국(수혜국 제외) 내 제조사의 경우, 제조사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한 개의 일본기업이 보유하고, 일본기업이

보유한 지분은 제3국의 기업이 보유한 지분과 같거나 더 많아야 한다. 제조사는 STEP 차관 약정 시 DAC의 ODA 수혜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 또는 지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위치한 국가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는 위치한 국가 내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위치한 일본기업의 연결제조사회사로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일본기업(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및 관련 부처의 법령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자회사가 포함된다. 제조사는 STEP 차관 약정 시 DAC ODA 수혜국 목록에 없는 국가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위치한 국가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상기 두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사는 위치한 국가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한편, 서비스의 경우에 일본기업과 해외에 위치한 일본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조달로 계상한다. 구체적으로 직접비용(엔지니어 출장비용, 디자인 비용, 아웃소싱 비용²¹⁾), 간접비용(엔지니어에 대한 월급, 출장비, 교통비와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보험 및 보증 비용 등의 현장에서의 간접비용과 항공료, 준비 비용, 프로젝트 안전 비용, 기술적 행정 비용 등의 직접 지원 비용), 일반 행정 비용이 포함된다.

21) 일본기업이 주문받은 경우만 인정

〈표 8〉 STEP 차관 지원 결정을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조달 계산

구분	주체	포함 조건
상품	일본에서 수행	- 별도 상세 조건 없음
	일본기업이 투자한 수혜국 내 제조업자	- 제조사의 지분 10% 이상을 한 개의 일본기업이 보유해야 하며, 일본기업의 지분의 비중은 제3국의 기업의 비중 이상 - 제조사는 수혜국에 등록된 법인 - 제조사는 수혜국에서 상품·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보유 - 제조사는 수혜국에서 실제 운영
	일본기업이 투자한 개도국(수혜국 제외) 내 제조사	- 제조사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한 개의 일본기업이 보유하고, 일본기업의 지분의 비중은 제3국의 기업의 비중 이상 - 제조사는 STEP 차관 약정 시 DAC의 ODA 수혜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등록 법인 - 제조사는 위치한 국가 내 상품·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보유 - 제조사는 수혜국에서 실제 운영
	선진국에 위치한 일본기업의 자회사	- 제조사는 일본기업(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자회사 - 제조사는 STEP 차관 약정 시 DAC ODA 수혜국 목록에 없는 국가에 등록된 법인 - 제조사는 위치한 국가 내 상품·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보유 - 위치한 국가에서 실제로 사업 운영
서비스	일본기업, 해외 위치한 일본기업	- 직접비용, 간접비용, 일반 행정 비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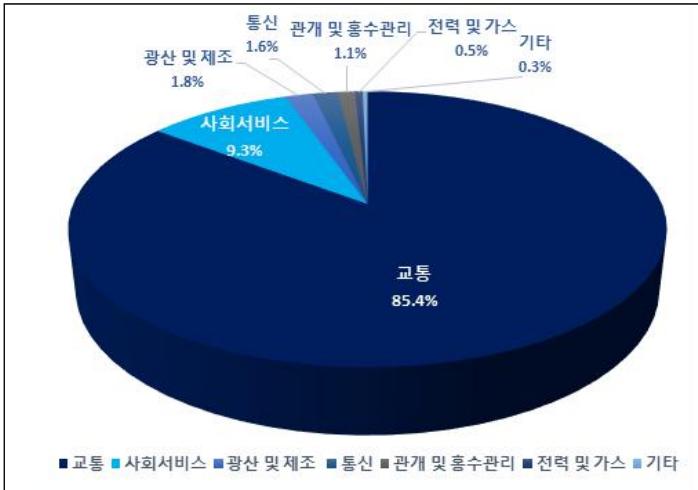
출처 : JICA 홈페이지

일본은 2018년 3월 승인 기준 STEP 차관으로 91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총 2조 3,711억 엔을 지원하였다. 승인액 기준으로 STEP 지원 전체의 80% 이상이 아시아 국가에 지원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60.4%)에 특히 집중되었다. 이 외에 남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17.5%,

중동에 대한 지원이 6.8% 순으로 집계된다. 사업 건수를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54.9%, 남아시아 15.4%, 동아시아 8.8%, 중동 7.7% 순이다.

섹터별 STEP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부문에 대한 지원이 전체 승인액의 85.4%(총 66개, 2조 254억 3,100만 엔)를 차지하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교통 부문 외에는 상하수도 및 위생, 공공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총 9개 사업에 2,197억 200만 엔(9.3%)이 지원되었다. 그 밖의 섹터에 대한 지원은 승인액 기준 1%대 미만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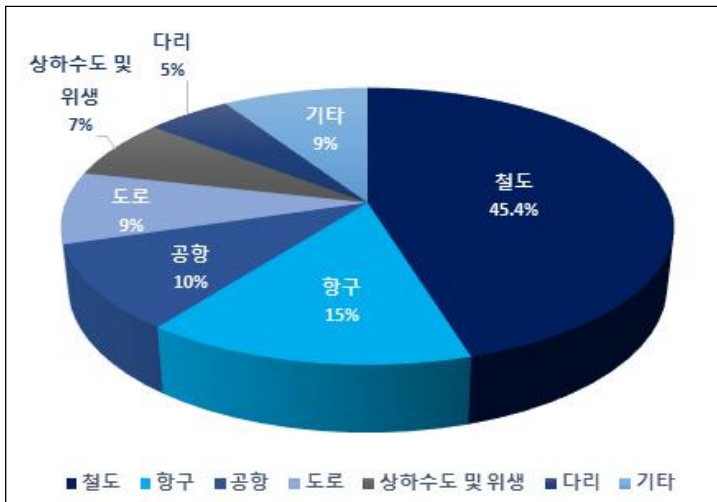
〈그림 3〉 STEP 프로젝트 부문별 지원 비중(금액 기준)



출처: JICA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교통 부문 중에서도 철도 프로젝트가 전체 승인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섹터이며, 그 외에는 항구, 공항, 도로 등 순으로 지원되었다. 철도는 총 22건으로 전체 승인액의 45.4%에 달하는 1조 757억 5,800만 엔이 지원되었으며, 항구 부문은 전체 승인액의 14.9%에 이르는 3,527억 8,300만 엔(11개 사업)이 지원되었다. 공항 프로젝트는 총 9건으로 전체 승인액의 10%를 차지하는 2,370억 3,100만 엔이 지원되었다.

〈그림 4〉 STEP 프로젝트 세부 섹터별 지원 비중(금액 기준)



출처: JICA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프랑스 AFD

본 절은 프랑스 정책금융 중 ODA 범주 내에서 프랑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ODA 조달시장 참여율 제고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을 조사한다. 특히, 프랑스 ODA 집행기관인 프랑스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이하 AFD) 등의 직접사업에 프랑스 기업의 참여수준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1) 프랑스의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프랑스 ODA의 주요 집행기관인 재무총국(Direction generale du Tresor)은 프랑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수단을 제공한다. 그 중 국고차관(Prets du Tresor) 및 민간부문지원기금(Fonds d'Aide au Secteur Prive, 이하 FASEP)이 ODA 범주에 해당한다.

2015년 프랑스 정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신흥국가기금(Réserve pays émergents, 이하 RPE)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차관을 정비하고 비양허성국고차관을 신설하였다. 양허성국고차관의 경우 OECD 지침에 따라 집행되는 ODA 범주에 해당하나, 비양허성국고차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더욱 부합하는 금융수단으로 해당 국가 및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상업성이 개입된 사업도 지원대상이다. 한편, 민간부문지원기금(FASEP)의 경우 연구조사와 녹색혁신 부문으로 구성되며, 연구조사의 경우 개발사업의 사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연구조사 사업이, 녹색혁신 부문의 경우 프랑스의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중요하다.

가. 양허성국고차관(Prets du tresor concessionnel, 舊 RPE)

양허성국고차관은 1998년에 도입되어 운용되었던 RPE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기금으로서 세부조건은 RPE와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지침에 따라 운용되며, 약 30개국의 주요 섹터를 대상으로 상업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차관을 제공한다. 해당 차관은 양허성 35% 수준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반면, 구속성 비율이 70% 수준으로 프랑스기업, 제품, 장비 등의 사용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수적이다.

연간 차관 규모는 3억 유로 수준이며, 매년 10개 정도의 사업에 지원 가능하다. 사업 당 규모는 1,000만-7,000만 유로이다. 차관사업 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2017년에 총 1억 9,700만 유로에 해당하는 4개 사업이 지원되었다. 이는 사업 수 기준으로 전년대비 6%,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규모이다.

지원 적격 사업은 국제사회 개발 이슈와 부합하는 사업, 수혜국 개발 우선순위 사업이며, 상업성이 개입되지 않는 사업으로 환경, 운송, 재생에너지 및 보건 분야가 주로 지원된다. 사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개발효과(사업 기술의 적절성, 수혜국의 우선순위), 상업적 레버리지 효과(기업전략에 대한 신뢰성, 기대 편익, 대안적 금융수단의 존재 여부),

프랑스기업의 참여수준(최소 70%) 등이다.

나. 비양허성국고차관(Prets du Tresor non-concessionnel)

비양허성차관은 프랑스 우선순위 협력국가 지원 제한이라는 RPE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차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프랑스 정부에 의해 신설되었다. 비양허성차관은 ODA보다는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목적에 더욱 부합하며, 상업성이 개입된 사업에도 출자가 가능하고 대출조건이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허성 차관과 구별된다. 다만, 대상 국가가 개도국에 한정된다는 점, 사업당 차관 규모, 사업 선정 시 경쟁수준 고려 등의 부분에서 양허성차관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다. 민간부문지원기금(Fonds d'Aide au Secteur Prive, 이하 FASEP)

프랑스 재무총국은 ODA 수단의 하나로 수원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프랑스기업의 ODA 기여 확대를 목적으로 FASEP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금융지원은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기술자 및 기업이 수행하며, 주로 개도국의 개발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도모하는 프랑스기업의 시장조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즉, 프랑스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수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작업을 주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연간 지원 규모는 약 2,000만 유로 수준으로 매년 20-30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당 지원 규모는 평균 40만 유로 수준이다. 지원조건으로 사업 수행 장소(해외시장), 사업 내용의 적절성, 후속 사업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을 선도적으로 연구한 후 향후 국고자금을 제외한 AFD, 국제기구, 해외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장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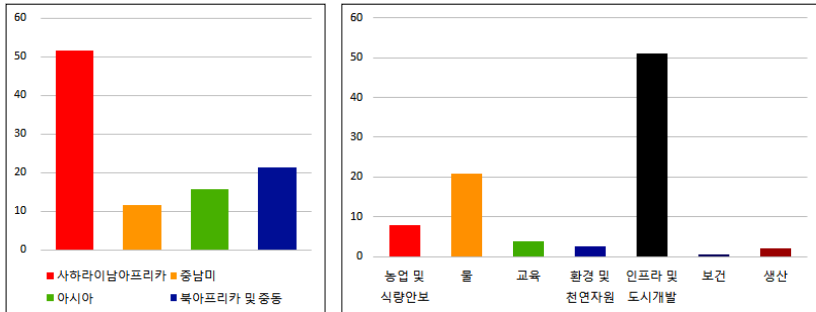
FASEP은 연구조사(Etudes)와 녹색혁신(Innovation verte)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 지원 사업이 상이하다. 연구조사 부문은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원조로서 개발사업 사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타당성조사, 사전조사 등의 연구 사업이다. 대부분 해당 정부의 개발 전략에 포함되어 있거나, 프랑스기업의 노하우 전수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에 해당된다. 주로 운송, 환경, 에너지, 보건, 통신, 농산업 등의 섹터 사업들이 수행된다. 녹색혁신 부문은 시범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서 혁신적인 프랑스기술의 효과성 입증을 위한 사업이다. 물,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룬다.

(2) 프랑스 AFD 차관사업 현황 및 입찰 특징

AFD의 전체 214개 차관사업은 금액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0.6%),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21.3%), 아시아(15.6%), 중남미(11.5%) 순으로 지원되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대부분의 사업이 마다가스카르, 베냉, 기니, 가봉 등 불어권 서아프리카에 집중

되어 있다. 부문별로 보면 인프라 및 도시개발(51.0%), 물(20.7%), 농업 및 식량안보(7.8%), 교육(3.9%), 환경 및 천연자원(2.6%), 생산(2.2%) 부문에 지원되었다.

〈그림 5〉 AFD 차관사업 증점 지역 및 분야



출처: AFD Opendata 바탕으로 저자 작성

AFD는 프랑스의 경쟁우위 부문 중 수원국의 개발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고 유·무상 원조의 적절한 제공을 통해 사업 기획 단계(기술원조, 타당성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본 구매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여 프랑스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수의 사업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기업의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지 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경우에도 프랑스기업의 현지법인 혹은 자회사인 사례가 다수이다.

AFD는 국제경쟁입찰 시,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즉, 사업 입찰 공고문에 세부 실적, 인력 기준, 조달 자재, 기술 표준, 언어구사력 등 입찰 자격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기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세네갈 수도사업의 컨설턴트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700mm 혹은 이상의 배관을 25km 이상 매립한 경험, 최소 1,250m³/h 이상의 수도 건설 사업을 지휘한 경력, 프랑스어 구사력이 우수한 인력으로 구체화하여 참여기업을 제한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요구함으로써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AFD 차관 중 50% 이상이 할당되는 아프리카 개발사업의 경우 기업 및 자재 현지 조달 조항이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현지법인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다수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세네갈 물 사업 중 배관 공사를 담당하는 Sogea SATOM, SADE CGTH, Eiffage Senegal이 각각 프랑스 대형 건설사인 Vinci, Veolia, Eiffage의 자회사 혹은 현지법인이라는 점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AFD는 입찰 자격에 프랑스어 구사 수준을 포함하거나 프랑스어를 주 언어로 선택함으로써 입찰 참가 자격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도 활용한다. 세네갈 수도사업의 컨설턴트 입찰도 모든 컨설턴트는 프랑스어 구사력이 우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바 있다. 현재 공고 중인 39개 사업 국제경쟁입찰 중 12개 사업만이 RFP가 영어로 작성되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비구속성 원조 확대가 과연 과거의 원조 관행을 개선하였는가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쟁 대상이 증가하면서 원조 조달비용을 줄이고 원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조 방식이라는 점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과 감시도 강화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구속성 원조 방식으로 수행되던 우리나라의 ODA 사업 관행의 개선에 대한 대내외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10년간 한국 ODA의 비구속화는 상당히 급속도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여타의 DAC 회원국에 비하여 한국 ODA의 비구속화는 아직 저조한 편이며, 이는 특히 비구속성 지원 금액보다 자체 비구속성 사업 규모를 산정할 때, 또한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에 궁극적인 한국 ODA의 완전 비구속화를 위해 고려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비구속성 ODA 확대에 의한 국내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동적으로 비구속성 금액으로 계상되는 수단²²⁾을 확대하고 국내 ODA 환경에 유리한 국가와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비구속성 ODA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만한 국가와 분야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개도국의 역량강화와 사업 수행 기회를 제고한다는 측면 이외에 비구속성

22) 일반 예산지원 및 국제수지 재정지원, 섹터 예산지원, 민관협력체제(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현지화 소요비용, 채무구제 관련 지원, 기타 NGO 지원 등

사업 확대에 의한 국내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즉, 개도국의 개발효과와 국내기업의 실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ODA의 비구속화를 위한 전략적 관점의 노력에 더해 ODA 사업 입찰 시 국내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돕는 정책 또는 제도를 수립하거나 사업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해외 선진 원조기관들도 자국 기업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들을 취하고 있음을 일본과 프랑스의 제도, 사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은 자국 기업의 ODA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국 컨설턴트를 통해 사업 발굴과 설계를 함으로써 입찰 단계에서 일본기업에 유리한 실적, 기술 등의 조건을 명시하거나 일본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비구속성 원조 원칙 하에서도 별도의 구속성 지원 제도인 STEP 차관을 운용하여 자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특히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STEP 차관을 통해 일본 기업 참여를 구속화하는 경향이 있어, STEP 차관으로 사업 규모가 큰 철도, 항구, 공항, 도로 등 교통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철도 섹터에 대한 STEP 차관 지원이 두드러지는데, 철도는 전체 엔 차관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지원 섹터이며, 엔 차관 승인액 상위 20개 사업 중 15개가 철도 사업에 해당하는 등 사업 규모도 커서 일본기업의 수주

여부가 중요한 섹터이다. 일본은 철도 사업에 대한 엔 차관의 3분의 1을 STEP 차관(전체 STEP의 45.4%)을 통해 구속성으로 지원하여 자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국 기업의 실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원조의 비구속화를 추진하더라도 별도의 구속성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주로 지원하는 섹터와 사업 규모가 큰 섹터에 대한 리스크를 절감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하다.

ODA의 전면적인 비구속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구속성 사업 지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구속성 사업 기초의 마련과 이미 국내기업과 협의가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구속화를 추진하는 비구속성 시범사업을 형성하는 작업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이후에는 PPP 사업을 확대하거나 국내기관이 진행한 기술협력을 사업에 연계하여 비구속성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순수 비구속성 차관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국과의 상생 협력과 EDCF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면적인 비구속성 ODA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해외문헌

CPGCBL (2017). Annual Report 2015-16.

OECD (2018a).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TAD/PG(2018)1].

OECD (2018b). 2018 Report on the DAC Untying Recommendation [DCD/DAC(2018)12/REV2].

온라인 자료

방글라데시 Dhaka Tribune (<https://www.dhakatribune.com/uncategorized/2015/01/07/deal-inked-for-matarbari-power-plant-consultancy-services>) (검색일: 2019.2.11.)

방글라데시 The Daily Observer (http://www.observerbd.com/details.php?id=73642&fb_comment_id=1320678108051407_1623044447814770) (검색일: 2019.2.11.)

방글라데시 The Daily Star (<https://www.thedailystar.net/matarbari-power-project-appoints-consultant-58896>) (검색일: 2019.2.11.)

방글라데시 The Independent (<http://www.theindependentbd.com/printversion/details/33067>) (검색일: 2019.2.11.)

인도뭄바이광역개발청 (<https://mmrda.maharashtra.gov.in/mthl#>) (검색일: 2019.1.22.)

인도 인디아타임즈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articleshow/55633793.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검색일: 2019.1.22.)

인도 Mint (<https://www.livemint.com/Politics/3Gh1qc4pRnTE2mmzGKVAO/MMRDA-receives-17-bids-for-Mumbai-Trans-Harbour-Link-project.html>) (검색일: 2019.1.22.)

일본국제협력기구 (<https://www.jica.go.jp>) (검색일: 2018.12.18.)

한국 워터저널 (<http://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05>) (검색일: 2019.1.22.)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¹⁾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목 차

- I. 서론
- II. 몽골의 보건 현황 및 보건의료 제도
 - 1. 몽골의 건강 수준
 - 2. 몽골의 보건시스템
- III.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 1. 대몽골 보건분야 원조 현황
 - 2.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시사점
- IV. 우리나라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 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사업, ODA정책연구18-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1. 서론

몽골은 우리나라의 ODA 중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안)(2016-2020)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몽골의 양자 국제개발협력 주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몽골 보건 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제한적이었다. 2016년 발표된 제2차 몽골 국가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에서도 보건분야가 중점 분야로 제시되었지만, 한국의 대몽골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거나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와 같은 교육연수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건은 개발협력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왔으며, 양자기구뿐 아니라 다자기구를 통해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 역시 개발협력사업에서 보건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몽골 국가 협력전략과 같이 대다수 중점 협력국의 중점 분야에 보건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글로벌 보건 분야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Health in all policies'를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몽골 역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른 글로벌 보건목표인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단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 의료 서비스의 질 문제,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취약계층(영유아, 여성, 노인 등) 대상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등 여전히 취약한 보건영역이 존재한다.²⁾

몽골 국가협력전략에 보건분야가 포함된 상황에서 국내 개발협력 주체들이 몽골을 대상으로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몽골을 대상으로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공여국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떠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그동안 몽골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해왔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원고는 몽골의 보건 현황 및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주요 공여국 및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등 국제 보건 관련 다자기구의 몽골 보건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몽골 보건 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WHO (2013b)

II. 몽골의 보건 현황 및 보건의료 제도

몽골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울란바타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의 80만 명에 이르는 인구는 여전히 비도시 지역에서 전통가옥(yurts/gers)에 거주하고 있다.³⁾ 울란바타르와 같은 도시 지역이 아닌 도시 외곽 지역들은 식수 위생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은 안전한 식수원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게르 내에서의 생활하는 것에 따른 실내 공기 오염 문제와 그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몽골의 기후 및 유목 생활 등으로 인한 음주와 육류 위주의 식습관 등으로 인한 비감염성 질환 발생 및 유병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⁴⁾

1. 몽골의 건강 수준

2016년 기준으로 몽골의 평균 기대수명은 69.6세로, 몽골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약 10년 정도 길게(여성=75.4세, 남성=65.9세) 나타난다.⁵⁾ 몽골의 평균 기대수명은 건강보장제도의 발전,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영양상태 개선으로 인한 모성 및 영유아 사망의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과 엄마의 건강과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영아 사망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 신생아

3) 몽골 통계청(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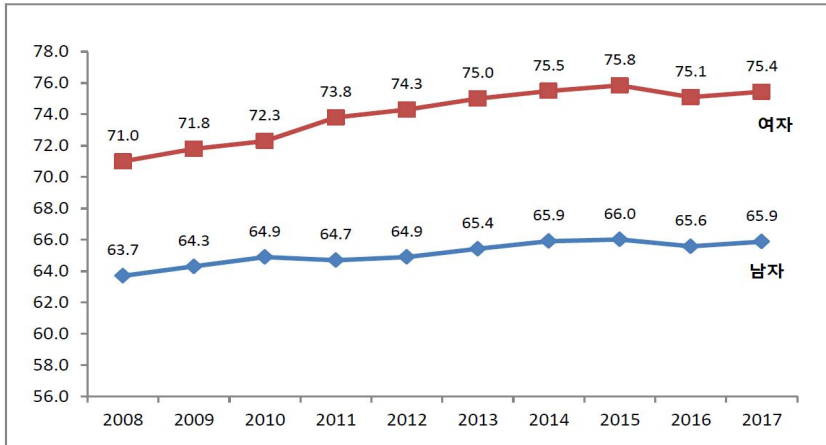
4) WHO (2017)

5) 몽골 통계청(2018)

천 명 당 15명까지 낮아졌으나, 2016년 급성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상승한 16.8명을 기록하였다.⁶⁾

〈그림 1〉 몽골의 기대수명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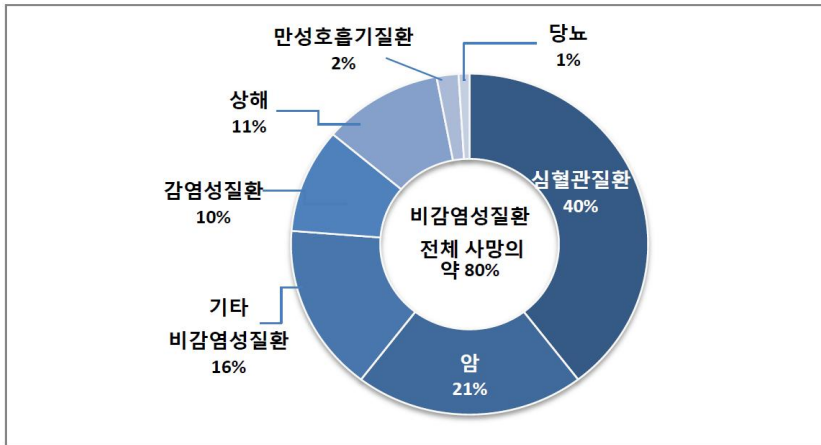
출처: 몽골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country) 반기별 일반 인구 및 연례 보고서, 성별 인구 기대수명, 2018.10.30. 인출하여 도식화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몽골의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비감염성 질환이 몽골의 전체 사망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환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40%)이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며, 그 다음이 암(21%)으로 나타났다. 몽골의 비감염성 질환 위험은 실내 대기 오염, 흡연과 과도한 음주, 적절한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높게 나타나며, 서태평양 지역의 국가 중 7번째로 높다고 WHO는 보고한다.⁷⁾

6) 몽골 통계청(2018)

7) WHO (2018)

〈그림 2〉 몽골의 주요 사망 원인(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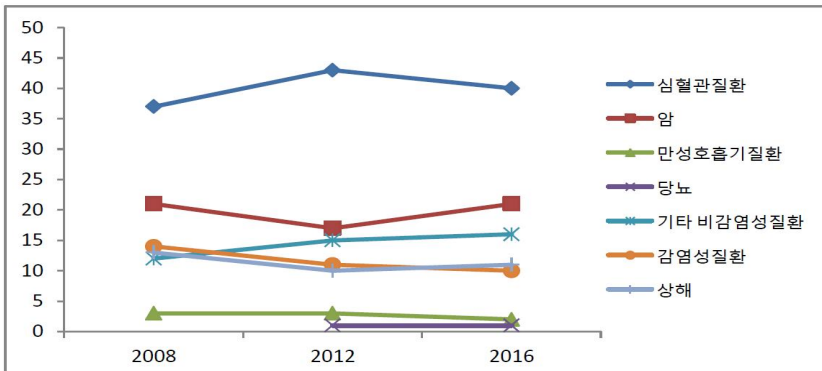


출처: WHO (2018), NCD Country Profiles, p.141 참조하여 구성한 전진아 외 (2018)에서 재인용

심혈관 질환과 암 외에 기타 비감염성질환(16%), 감염성질환(10%), 상해(11%) 등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⁸⁾ 몽골 국민 사망 원인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다른 질환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는데 반해,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8) WHO (2018)

〈그림 3〉 몽골의 주요 사망 원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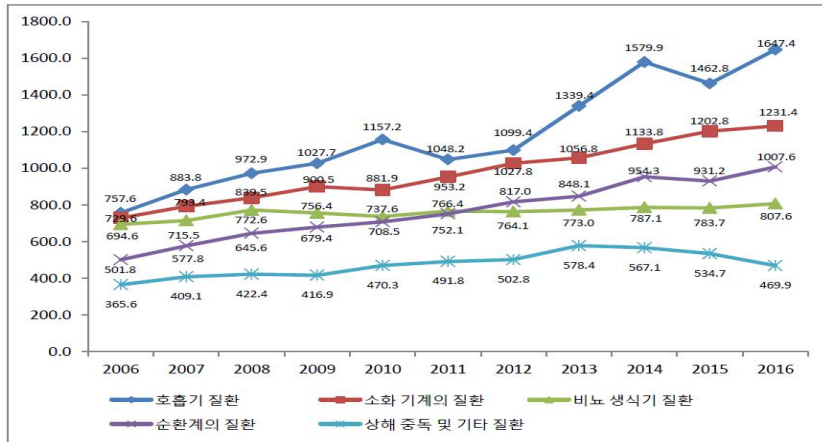
출처: WHO (2011, 2014, 2018), NCD Country Profiles를 참조하여 구성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전 세계적인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질병 부담 증가 추세에 따라 몽골 역시 산업화, 도시화 등 인구 사회학적 변화를 겪으며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이환율은 감소하고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있다.⁹⁾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의 주요 요인이 되는 술과 담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역시 급증하고 있어 45-64세 인구의 반 이상 즉 53.2%가 비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실제로 몽골은 비감염성 질환 중 5가지 주요 질환이 2006년 이후 10년 동안 1.3-2.2배 증가하였다.¹⁰⁾ 특히 가장 높은 유병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은 2006년 인구 1만 명당 757.6명 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 1647.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소화기계 질환은 2006년 인구 1만 명당 729.6명이었던 데 비해 2016년에는 1231.4명으로 증가했다.

9) 몽골 통계청(2017)

10) 몽골 보건개발센터, WHO (2017)

〈그림 4〉 몽골의 인구 1만 명당 주요 5대 질환 유병률 추이



출처: 몽골보건개발센터, WHO Western Pacific Region (2017), 2016년 보건통계, p.72.을 바탕으로 정리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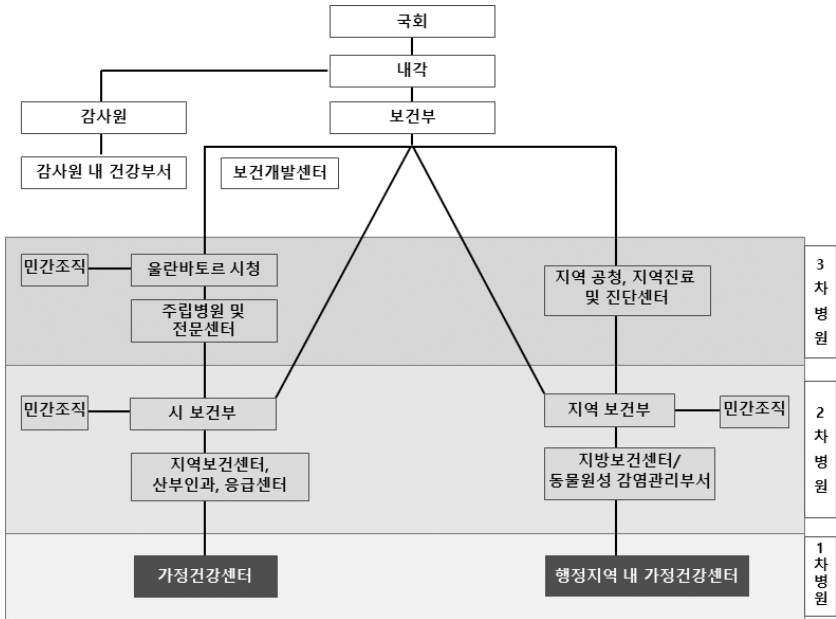
2. 몽골의 보건시스템

위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은 SDG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목표로 모든 이에게 접근가능하고 공평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GDP의 4.73%를 보건분야에 지출하고 있다.¹¹⁾ 몽골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다음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3단계 수준으로 구분되어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 구역에 따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정건강센터(family health center)를 통해 1차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의 보건센터(district public health center), 주립병원 및 전문센터에서 2, 3차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이다.

11) 총 보건지출 중 정부예산 및 사회건강보험을 통해 정부가 지출하는 비율은 약 55% 정도이며, 민간 지출(Private expenditure on health)은 44.6% 정도임.

<그림 5>

몽골의 보건의료체계



출처: WHO (2013). Mongoli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3 No.2을 바탕으로 정리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1차 의료의 경우 국가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몽골인은 무료로 가정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울란바타르 시에서는 가정건강센터에서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가정건강센터(각 아이막(Aimag)¹²⁾마다 한 곳), Soum¹³⁾ 보건소(각 soum마다 한 곳), Inter-Soum 병원(여러 soum 커버)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은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환

12) 아이막(Aimag)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조직임

13) Soum은 아이막의 하위 행정조직으로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행정조직임. 그 외에도 Soum의 하위 행정조직인 Bagh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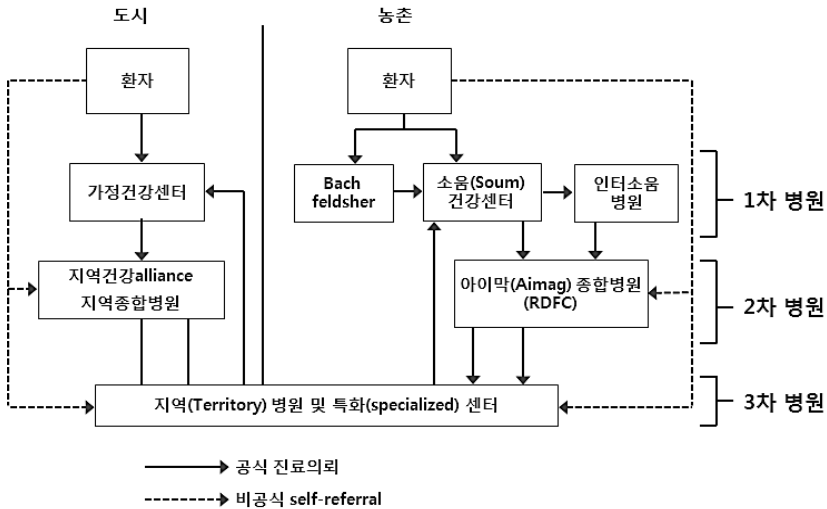
치료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몽골 '보건법'에 따라 가정건강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며, 주요 사업으로 임신부와 출산 후 산모와 아동에 대한 산모 정기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모자건강과 가정계획 사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사고 등으로 인해 위급 상태에 처한 환자의 진료와 치료, 중증질환 환자에 대해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상급의료원으로 환자 의뢰 및 지역주민을 위한 현장진료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220곳 가정건강센터에서 968명의 의사와 892명의 간호사가 진료를 하고 있으며, 가정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외래환자는 연간 총 6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¹⁴⁾

몽골에서는 1차 의료 서비스를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환자를 상위레벨인 보건센터나 주립병원 및 전문센터와 같은 2,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한다(그림 6 참조). 2차 의료 서비스의 경우 아이막 종합병원, 구(district) 종합병원과 공중보건소(울란바타르)를 통해 제공되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구조이며, 병원 크기는 병상 15개 규모에서 225개 규모까지 다양하다. 3차 의료기관인 전문센터와 달리 지리적 접근성이 높으며, 평균 병상 이용률은 78% 정도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9개 주요 전문분야와 10개의 하위 전문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14) 몽골 보건개발센터, WHO (2017)

〈그림 6〉 몽골의 의료 서비스 이용 체계



출처: WHO (2013). Mongoli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3 No.2을 바탕으로 정리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3차 의료기관은 울란바타르 내 중앙 병원, 전문센터, 아이막 4곳의 지역진단 치료센터를 포함한다. 울란바타르의 중앙병원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울란바타르 내에 국립 제1중앙병원, 제2중앙병원, 제3중앙병원 세 곳이 있으며, 그 외에도 울란바타르에는 국립감염성 질병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암센터 같은 전문기관이 수도에서 중앙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진단 치료센터의 경우 서부지역 (Khovd), 동부지역(Dornod), Khangai 지역(Uvurkhangai), Erdenet 지역(Orkhon)의 네 개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몽골에서는 보건센터나 주립병원 및 전문센터와 같은 2, 3차 의료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그림과 같이 1차 의료 기관인 가정

건강센터에서 진료의뢰서를 받고, 2,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3차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중 약 25~30% 정도가 2차 병원으로부터 전원한 환자들이고 1차와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 역시 31.1% 정도에 달한다. 몽골에서는 이처럼 3차 의료기관을 바로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사회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고 입원서비스에 대해 전액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을 거쳐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성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¹⁵⁾

공공의료시스템 외에도 몽골은 민간영역을 통해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민간의료부문은 의료 인력의 수준, 환자 친화적 치료, 장비 면에서 정부 병원에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주로 2차 수준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과, 내과, 산부인과, 전통 의학 및 첨단 실험실 서비스에서 강점을 가진다.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시설의 민간소유가 1990년대 말에 허용된 이후로 시설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울란바타르에 위치해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대다수는 5-30병상 정도의 소규모 개인 병원으로, 이러한 소규모 개인병원이 전체 민간병원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¹⁶⁾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인 건강가정센터 등이 지역단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울란바타르에서 운영되는 건강가정센터의 수가 더 많으며,

15) WHO (2013b)

16) 몽골 통계청(2018)

2차와 3차 의료기관, 특히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수도인 울란바타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민간 의료기관 역시 울란바타르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몽골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신 인구조사자료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¹⁷⁾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에 43%에서 30% 아래로 감소한데 반해 도시와 농촌의 보건시설 수와 직원 수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 및 적절하고 충분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몽골은 현재의 인구 이동에 따른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확충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표 1〉 몽골의 단계별 공공 및 민간 의료시설의 서비스 내용

제공 단계 및 비용		서비스 내용
1차 의료		
농촌	바그의 준의사 (Bagh feldsher)	자신의 게르(전통 가옥)에 살며 일하는 중간 수준의 의료 인력. 가정 방문, 산전산후관리, 건강증진 및 교육, 조기 발견, 질병 감시 및 역학 모니터링, soum 병원으로 환자 의뢰하기, 필수 의약품 처방, 공공의료 서비스
	소움 보건소 (Soum health centre) 인터소움 (Inter-soum) 병원	평균 15-30개의 침대, 의사(1차 진료, 가정의학 전문의 및 일반의), 간호사, 조산사 및 보조직원이 24시간 서비스 제공, 2,000-15,000인구 커버, 건강 증진 및 교육; 예방 치료(예: 예방 접종 및 검사), 질병 감시 및 역학 모니터링, 처방전 포함 외래 서비스, 정상 분만 포함 입원환자 서비스, 소규모 수술, 진단 테스트, 가정 방문, 응급 치료, 공공 의료 서비스, 완화 치료, 재활 치료

17) WHO (2013a)

가정건강센터 (Family health centre, 도시)	3-4명의 가족 의사와 의사 한 명당 간호사 한 명으로 구성됨. 처방전 포함한 외래 서비스, 예방 치료(예: 예방접종 및 암 검진), 질병 감시 및 역학 모니터링, 진단검사, 가정 방문, 응급 치료 (제한), 공공 의료 서비스, 완화 치료, 재활 치료	
2차 의료		
구 종합병원 (District general hospital, 울란바타르)	200-300개의 병상, 24시간 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보조인력 근무, 2차 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피부과, 신경과; 처방전을 포함한 외래환자 서비스; X레이, 초음파 포함 진단 테스트; 응급 치료, 공공 의료 서비스	
아이막 종합병원 (Aimag general hospital)	24시간 의사(전문의와 일반의), 간호사, 조산사 및 보조인력 근무, 105-500개의 침대, 5만-10만 명 대상, 전문 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피부과, 신경과; 처방전을 포함한 외래환자 서비스; X레이, 초음파 포함 진단 테스트; 응급 치료, 공공 의료 서비스	
3차 의료		
지역진단치료센터 (RDTc, 아이막)	전문 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과; 처방전 포함 외래환자 서비스; 진단 테스트; 응급 치료	
수 도	종합병원 (Central Hospital)	전문 서비스: 심장혈관외과, 신경외과, 대장수술, 혈액, 전염병,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전통 의학 및 모자 보건; 2차 수준 전문 치료: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서비스, 진단 검사, 응급 처치
	전문센터	국립전염병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암센터 등
민간의료서비스		
클리닉	치과, 전통의학 전문외래클리닉	
병원	내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신경과 전문병원	
요양원 (사나토리움, Sanatorium)	재활, 전통의학 서비스	

출처: WHO (2013). Mongoli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3 No.2을 바탕으로 정리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또한 몽골은 SDGs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에서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Social Health Insurance)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몽골은 1994년 취약계층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2006년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몽골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몽골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모든 몽골인이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¹⁸⁾ 2013년 기준 몽골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7%에 이르며, 2010년의 82.6% 대비 약 15% 포인트 증가하였다.¹⁹⁾

몽골인들은 근로여부,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내고 있는데, 근로자의 보험료 비율은 매년 정부가 지정하며 매월 임금의 4%를 초과하지 않는다. 기업 오너와 자영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소득 신고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사무소(Social Insurance General Office: SIGO)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목민, 실업자, 시민 등의 보험료 비율은 국가사회보험위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Committee: NSIC)의 제안에 기초하여 정부가 설정한다.

몽골의 건강보험 외에 몽골의 보건 의료 서비스는 정부예산을 통해서도 지원된다. 즉, 정부예산과 사회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구분되는데 정부 예산은 주로 1차 의료와 산모건강을 포함한 공공 및 예방서비스에 지원되며, 사회건강보험은 개인 의료 서비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건강보험은 개인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서비스, 주로 입원환자 대상 서비스에

18) 직장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한국의 직장 건강보험과 같이 고용주가 일정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직장이 불분명한 경우, 소재지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19) UNDP (2014)

초점을 두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²⁰⁾ 또한 몽골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건강보험 외에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 건강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패키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외래검사, 입원 치료 및 예방 검사 등이 포함되며, 대다수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III.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1. 대몽골 보건분야 원조 현황

몽골은 JICA, KOICA, WPRO, ADB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주체들과 넓은 범위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몽골 보건분야 원조규모를 보면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해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영역이나 의료 교육 및 훈련 영역,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원조 규모가 해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장 많은 원조가 이루어진 영역은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영역으로 총 89백만 불이 투입되었다(표 2 참조).

20) 질병 진단 및 검사, 2차 및 3차 진료에서의 입원 및 외래서비스, 전통의학 사용입원 치료, 요양원과 재활센터에서의 장기치료, 완화의료, Bagh, Soum 및 건강가정센터 의사에 의해 처방된 필수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사회건강보험에서 지원함.

〈표 2〉 대몽골 보건분야 다자기구 ODA 영역별 원조 규모(2012-2016년)

단위: 백만 불

구분	부문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보건 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2.88	59.49	20.85	2.15	3.77	89.14
	의학교육/훈련	0.68	0.45	0.24	66.05	0.03	67.45
	의학연구	0.05	0.02	0.04	0.08	0.03	0.22
	의료서비스	1.78	2.95	2.72	12.34	2.62	22.41
기초 보건	기초보건관리	1.85	1.48	1.29	2.24	0.77	7.63
	기초보건인프라	0.34	5.79	1.79	0.22	0.18	8.32
	기초영양	0.26	0.46	0.23	0.31	0.12	1.38
	감염성 질환 관리	0.65	1.14	0.11	0.43	0.09	2.42
	보건교육	0.74	0.21	0.05	0.13	0.25	1.38
	말라리아 관리	0.00	0.00	0.00	0.00	0.00	0
	결핵 관리	0.00	0.49	7.13	0.04	5.10	12.76
인구 및 재생산 건강	보건 인력 개발	0.27	0.35	0.76	0.80	0.06	2.24
	인구정책과 행정관리	1.50	1.80	1.73	0.01	0.00	5.04
	재생산 건강	0.47	0.64	0.64	0.27	0.43	2.45
	가족계획	0.42	0.34	0.03	0.00	0.00	0.79
	HIV/AIDS를 포함한 성매개질환 관리	0.22	0.03	0.06	5.05	0.04	5.4
인구 및 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 인력 개발	0.00	0.00	0.00	0.00	0.00	0	
합계		12.11	75.63	37.66	90.12	13.49	229.01

출처: OECD Aid to Health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그동안 가장 많은 ODA 자금이 투자된 보건정책 및 행정 관리, 의료 교육 및 훈련,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연도별로 어떤 공여국이 어떠한 성격의 원조를 얼마나 해왔는지를 최근 3년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영역을 보면, 국제 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가 19.5백만 불로

가장 많은 기여를 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 WHO, 아시아개발은행 특별기금(ADB Special Funds), 한국 순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개발협회(IDA)는 유상원조 방식으로 2014년 e-health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일본은 JICA를 통해 무상원조 방식으로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표 3〉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영역의 주요 공여국 및 ODA 규모

단위: 백만 불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아시아개발은행 특별기금	-	-	1.10	1.10
카자흐스탄공화국	-	-	0.01	0.01
독일	-	0.01	-	0.01
국제개발협회(IDA)	19.50	-	-	19.50
일본	0.59	1.24	1.48	3.32
한국	0.06	0.20	0.40	0.65
룩셈부르크	-	0.14	-	0.14
유엔아동기금(UNICEF)	-	-	-	-
영국	0.01	-	-	0.01
세계보건기구(WHO)	0.69	0.56	0.78	2.03
합계	20.85	2.15	3.77	26.78

출처: OECD Aid to Health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의료 교육 및 훈련 영역의 주요 공여국은 일본의 JICA로 2015년 몽골(Mongolia-Japan) 교육 병원(Teaching hospital) 건설을 위해 무상원조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2016년 이종욱 펠로우쉽 및 의료 교육 및 훈련을 위한 NGO 봉사단 파견으로 3만 불을 무상원조로 지원하였다.

〈표 4〉 의료 교육 및 훈련 영역의 주요 공여국 및 ODA 규모

단위: 백만 불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프랑스	0.01	0.01	-	0.02
독일	0.06	-	-	0.06
일본	0.004	66.01	-	66.01
한국	0.16	0.02	0.03	0.21
폴란드	-	0.02	-	0.02
세계보건기구(WHO)	0.001	-	-	0.001
합계	0.24	66.05	0.03	66.32

출처: OECD Aid to Health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 영역의 주요 공여국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한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과 룩셈부르크, WHO는 꾸준하게 의료 서비스 영역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오스트리아는 2015년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몽골의 제1중앙병원 의료시설 및 장비 업그레이드 및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모자보건을 위한 국립센터 및 국립암센터 업그레이드를 위해 9.85백만 불을 무상원조로 지원하였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주로 심혈관 질환 진단 및 치료, 심혈관 질환 관련 원격진료, 모자보건, 종양학 등과 관련한 지원을 무상원조 방식으로 해왔다. 한국은 꾸준히 외과, 전통의학, 내과 등 의료 영역의 치료 제공, 물리 치료, 방사선 치료, 혈액검사 등을 위한 전문기술 및 지식 전수,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단 파견을 위해 매해 무상원조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표 5〉 의료 서비스 영역의 주요 공여국 및 ODA 규모

단위: 백만 불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오스트리아	-	9.85	-	9.85
카자흐스탄 공화국	0.01	0.01	-	0.03
독일	-	0.02	-	0.02
한국	0.65	0.50	0.51	1.66
룩셈부르크	1.88	1.80	2.00	5.68
폴란드	0.01	0.01	-	0.02
슬로바키아 공화국	0.01	-	-	0.01
유엔아동기금(UNICEF)	-	0.05	0.05	0.10
세계보건기구(WHO)	0.16	0.11	0.06	0.33
합계	2.72	12.34	2.62	17.68

출처: OECD Aid to Health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2.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시사점

몽골에 대한 주요 공여국들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각 국가별로 협력사업이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몽골이 목표로 하는 ‘Leaving no one behind’로 대변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공여국인 일본과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은 JICA를 통해 무상원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 건설 및 의료장비 구입과 같은 인프라 지원과 더불어 보건의료 전반의 기술 협력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일본이 초점을 두고 대규모의 자금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몽골-일본 교육 병원

건설 프로젝트로, 의료기관 건설과 더불어 의료인력 역량 강화 기회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몽골에서의 활동기준을 수립하고 우선순위 분야와 개발 이슈를 명확히 정했다는 점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일본과 같이 대몽골 보건분야 지원을 무상 원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일본과는 달리 보건 분야에 한정하여 대몽골 원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보건 분야 중에서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특히 국립 심장센터를 중심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국립 심장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 기능 강화와 더불어 센터의 보건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²¹⁾ 또한 몽골의 광대한 국토의 면적과 보건의료 인프라 및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립심장센터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원격 진료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일본과 룩셈부르크의 사례는 한국 역시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한국의 강점을 파악하고, 대몽골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예산 편성 구조상 단기 계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분야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적어도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초보건 영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 정책 및 행정 관리

21) <https://luxdev.lu/en/activities/country/MON>

영역이나 의료서비스나 의료 교육 등 그동안 해왔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우선순위 영역이나 비전 혹은 목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우리나라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우리나라와 몽골은 1990년대에 국교를 맺은 이후 상호 친선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보건분야와 관련해서는 2011년에 한몽 보건의료협력 약정을 맺음으로써 통한 양국 보건의료분야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고, 몽골 의료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Seoul Project 추진, 민간 의료기관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몽골 보건분야 협력은 주로 자원봉사단 파견, 의사연수교육, 대형병원 의사, 임상연수 등 주로 인력 교류 혹은 몽골의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연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ODA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보건과 기초 보건으로 구분되는 보건분야 전체 지원 규모는 1.54백만 불 정도이며, 연도별로 다른 분포를 가지나 2016년의 경우 기초 보건보다 일반 보건에 해당하는 분야에 ODA 자금이 많이 투입되었다. 보건 영역 중 일반 보건 영역에서는 보건 정책 및 행정관리 영역과 의료 서비스 영역에 ODA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기초보건 영역에서는 기초보건 케어 영역에 ODA 자금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지원되었다.

〈표 6〉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세부 영역별 지원 규모(2012-2016년)

단위: 백만 불

구분	부문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보건 일반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1.07	2.06	1.35	1.53	1.54	7.55
	의학교육/훈련	0.62	1.03	0.87	0.72	0.94	4.18
	의학연구	0.02	0.12	0.06	0.20	0.40	0.80
	의료서비스	0.34	0.45	0.16	0.02	0.03	1.00
기초 보건	기초보건관리	0.02	0.005	-	0.01	-	0.035
	기초보건인프라	0.25	0.46	0.65	0.50	0.51	2.37
	기초영양	0.45	1.03	0.48	0.80	0.60	3.36
	감염성 질환 관리	0.12	0.05	0.26	0.48	0.35	1.26
	보건교육	0.14	0.69	-	-	-	0.83
	말라리아 관리	0.20	0.19	0.18	0.25	0.12	0.94
	결핵 관리	-	-	-	-	-	
보건 인력 개발	-	0.10	0.05	0.07	0.13	0.35	

출처: OECD Aid to Health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전진아 외(2018)에서 재인용

한국의 대 몽골 보건분야 지원은 무상원조 중심으로 운영된다. OECD Aid to Health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국의 보건분야 지원 건수는 총 123건으로, 매해 약 20여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 개발협력 주체인 KOICA와 더불어 EDCF, KOFIH가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주로 KOICA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123건의 사업 중 대다수인 103건이 KOICA를 통해 지원되었고, 주로 자원봉사단 파견, 역량 강화 등의 무상원조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KOICA의 1991년부터 2017년간 몽골 지원 실적은 총 225백만 불이며, 내용으로는 프로젝트 57건, 민관협력 95건, 연수생 2,351명,

봉사단 4,381명 등이다. 2017년의 지원실적을 보면, 프로젝트 2건, 개발컨설팅 1건 포함 총 11백만 불로, 국별연수가 3건(총 57명), 다국가 연수 23건(총 42명), 석사학위 9개 과정(총 11명), WFK 일반봉사단, 중장기자문단, 글로벌협력의사 등(총 517명), 민관협력 2건(53만 불) 등이다.

〈표 7〉 KOICA 대몽골 지원실적(1991-2017년)

(단위: 만 불)

연도	1991-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지원액	2,725	1,194	1,029	2,354	2,601	2,853	2,549	2,598	2,158	1,389	1,101	22,551

출처: KOICA(2018). KOICA 대몽골 지원 현황, KOICA 통계자료

또한 EDCF는 1992년 이후 몽골에 16개 사업 총 395.3백만 불을 지원하였으며, 주요지원 분야는 몽골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보건, 에너지, 환경보호분야이다. EDCF는 대 몽골 보건분야에 1992년 몽골 주사기공장 건설사업 5.2백만 불²²⁾, 2011년 국립의료원 건립사업 55.5백만 불 등 총 60.7백만 불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EDCF는 몽골이 가장 높은 유병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 감소를 위해 2017년 10개 아이막 지역난방시스템 개선사업에 148.7백만 불, 2018년 울란바타르 대기개선 프로젝트에 60백만 불을 지원하였다.²³⁾ 이중

22) EDCF가 몽골에 지원한 최초의 사업인 주사기공장 건설사업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간염, AIDS 등 감염성 질병 예방에 기여하였음

23) 10개 아이막 지역난방시스템 개선사업은 열 플랜트 배기가스 처리설비 설치를 통해 석탄 연소가스 과다 배출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직접효과 외에도 노후화된 난방 시스템 설비 개선을 통해 가정 내 난방 및 온수 공급을 개선하여 개별 가구 내 연소가스 발생을 줄여 실내 대기 오염 개선을 통해 몽골의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울란바타르 대기개선 프로젝트는 EDCF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협력사업으로 몽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난방시스템 개선, 병원 및 유치원 단열시설 개설 등을 통한 직접적인 대기개선과 함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도시 계획 관련 Action Plan 작성, 환경

국립의료원 건립사업은 몽골 내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인 제2중앙병원 내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등 16개과 103개 병상규모 병원을 신축하고 PET/CT, MRI 등 진단장비와 총 329개 품목 5,513개의 필수 의료기자재 및 장비를 제공하여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동 사업은 몽골 의료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KOFIH가 사업 타당성조사를 무상사업으로 진행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지역건강센터, 차량용 원격진료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 의료 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가능성 개선을 통한 의료 수혜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표 8〉 EDCF 대몽골 지원실적(1992-2018년)

(단위 : 백만 불, %, 건)

구 분	보건	정보통신	교통	에너지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계
지원금액	60.7	47.4	43.3	157.6	24.3	2.0	60.0	395.3
비 중	15.4	12.0	11.0	39.9	6.1	0.5	15.1	100.0
사업건수	2	3	4	3	2	1	1	16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 공적 개발협력 주체인 KOFIH는 EDCF와의 유·무상 연계 사업 이외에도 매해 진행되는 이중육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의 보건부 담당자 및 보건인력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그리고 KOFIH는 몽골 보건부와 협력하여 모바일 헬스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을 한국공동 모금회와 함께 WHO에 자발적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연구소 역량강화 계획 수립 등의 중장기 환경개선 정책수립 지원, 어린이 대상 폐렴 연쇄상구균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호흡기 질환 감소를 위해 힘쓰고 있기도 함.

V. 결론 및 시사점

몽골은 중·저소득 국가로 자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도입 및 전 국민 대상 확대 개편, 1, 2, 3차 보건 의료 체계 구축, 원격진료 등을 통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성장률 감소, 물가와 환율 상승 등 경기 침체 문제로 인해 몽골은 보건 의료 분야 개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몽골이 경험하고 있는 보건 문제에 대응하고 몽골의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몽골은 자체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다자 및 양자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역시 몽골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 몽골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하여 발표한 제2차 몽골 국가협력 전략(CPS)에서 제1차 국가협력전략(2012-2015)과는 달리 보건분야를 중점 분야로 새롭게 포함하였다.

몽골 국가협력 전략 중 보건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은 비전염성 질병 및 중독성 물질의 통제 및 예방 확대, 깨끗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 관리 역량 강화를 주요 영역으로 제시한다. 이는 몽골에서 전염병의 발생 빈도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육류 위주의 식습관, 높은 음주율, 불량한 위생상태, 물 위생, 낮은 보건 의료 역량, 보건 의료 시설, 장비, 인력 부족 등 보건문제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위장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 발생률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요 영역은 몽골이 경험하는 보건이슈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듯이 개발협력 사업에서 중요시되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한국 개발협력 사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몽골이 가지고 있는 보건 수요에 맞는 지원과 더불어 몽골이 자국의 보건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

즉,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몽골이 경험하고 있는 보건 문제에 대한 몽골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전문성 높은 의료인력과 비용 효과적인 보건 의료 제도 등 우수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몽골의 보건, 의료분야 개발수요인 비감염성 질환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²⁵⁾

몽골의 보건분야 수요가 확인되고,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한국의 역량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이 강화되기는

24) 김진희 외(2013)

25) 관계부처합동(2015)

제한적이다.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은 한국의 공적 국제 개발협력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국제 개발협력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몽골에는 이미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양자 및 다자기구가 있으며, 각자의 우선순위와 강점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몽골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다수의 개발협력 주체들은 보건 재정,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고, 보건의료서비스의 물리적 및 가격 접근성 등 보건 시스템 강화를 통한 건강보장을 위한 활동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 활동의 중복성을 피하고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2차 국가 협력 전략에 보건이 주요 분야로 제시되어있는 만큼,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네트워크 참여는 공여국들 간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원조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이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활동을 구상하고 몽골의 상황과 맥락, 보건 수요에 맞춘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향후 한국의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가 몽골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KOICA와 KOFIH, EDCF 각 주체가 각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주체 간 협력 및 조정에 기반을 둔 활동들이 몽골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 진행 시 자본이 필요한 경우는 EDC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의료 인력 대상 교육이나 연수는 KOFIH가 담당하고, KOICA는 필요한 물자나 자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조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무상원조 중심의 사업과 더불어 지원방식을 유상과 무상 사업 간, 개발조사, 프로젝트, 기술지원 등 사업 간 연계강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제2차 몽골 국가협력 전략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원조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몽골 정부의 국가개발계획 및 장기개발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은 한국이 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일본의 경우 보건분야를 포함하여 몽골에서 각자가 할 유상이나 무상원조 사업들을 3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행정도를 점검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중장기 종합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협력전략이 수립되어

있지만 보건분야가 중요한 분야이고, 왜 보건분야에 협력을 해야 하는지, 보건분야 중 어떠한 영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개발협력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다 강화된 국내외 국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네트워크와 구체성이 담보된 중장기 계획에 기반을 둔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큰 방향성 아래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몽골의 보건분야 수요에 맞는 보건 사업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몽골의 건강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장제도 강화는 SDGs 2030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의 필수 요소이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몽골 역시 건강보험제도 운영 및 관리 개선, 보건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성 개선,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장 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기존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보건인력 대상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해왔고, 이를 통한 몽골의 보건인력들과의 네트워크들도 구축되어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몽골이 경험하고 있는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영역에 대한 몽골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역시 초점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는 제2차 몽골 국가 협력 전략에도 제시된 사항으로, 한국은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몽골에 전수할 수 있는

다양한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 모형들이 이미 구축되어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이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로의 연계 시스템이나, 지역사회 보건소 기반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자 대상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모형이 이미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몽골의 지역적 특성,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한 모형들을 시범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금 요약해보면, 몽골은 한국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의 중점국 중 하나이며, 제2차 몽골 국가 협력전략에 보건분야가 중점분야로 채택되는 등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몽골인의 건강증진 및 보건문제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의 국제개발협력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원 사업들의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합동(2016.12). 몽골 국가협력전략.
김진희 외(2013).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전진아 외(2018).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문헌

- 몽골 국가통계국(National Statistics Country) 2017 『반기별 일반 인구 및 연례 보고서』
몽골 통계청(2017).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몽골 통계청(2018). Socio-economic situation of mongolia, 2018/7
몽골보건개발센터, WHO Western Pacific Region (2017). 2016년 보건통계
UNDP (2014).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Mongol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WHO Western Pacific Region (2017). Health indicators 2016.
WHO (2011). NCD Country Profiles.
WHO (2013). Mongoli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3 No.2
WHO (2013a). Mongoli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Vol.3 No.2.
WHO (2014). NCD Country Profiles.
WHO (2018). NCD Country Profiles.

온라인 자료

- 룩셈부르크 개발원조기구. 몽골 대상 활동.
<https://luxdev.lu/en/activities/country/MON> (검색일: 2018.10.25.)
OECD Aid to Health 홈페이지. 보건분야 지원사업.
<http://www.oecd.org/dac/stats/aidtohealth.htm> (검색일: 2018.7.10.)
WHO. 2017.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apps.who.int/gho/data/node.cco> (검색일: 2018.8.20.)

EDCF

III. 한국의 개발협력

EDCF 인프라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EDCF 인프라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강경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목 차

- I. 서론
 - II. 기후변화 적응과 교통인프라
 - 1. 개발과 교통인프라
 - 2. 기후변화 적응과 교통인프라
 - III. 공적원조의 교통인프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패턴 분석
 - 1. 리오마케 상의 기후변화 적응지원 패턴
 - 2. 공여국 지원 사례: 일본의 교통인프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 IV. EDCF 인프라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요소
 - 1. EDCF 지원 국가 현황과 기후 취약국
 - 2. EDCF 도로분야 기후변화 적응 지원 및 개선 방안
 - 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I. 서론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나 특히 저개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로 일어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 분야의 경우 에너지 섹터와 함께 기후변화 완화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해수면의 상승, 극단적 폭서·폭한, 강수량의 변화 및 이에 따른 홍수, 산사태 등의 피해로부터 교통 인프라를 보호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프라의 개발은 SDGs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중진개도국을 중심으로 개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이미 개발한 인프라의 유지보수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개도국의 교통 분야 내 기후변화 적응을 도로분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고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을 분석하여 EDCF의 교통분야 지원 시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후변화 적응과 교통인프라

1. 개발과 교통인프라

교통은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에너지 분야와 함께 경제 사회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¹⁾ 왜냐하면 교통은 경제와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통의 개발에 대한 기여는 가격 절감, 서비스·경제활동 기회에 대한 접근성 증가, 직간접 고용효과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원활한 수송을 통해 물류의 수송비용을 절감하고 농산품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경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수송이 가능해지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의 기능은 새로운 시장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예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예로는 세계은행의 베트남 지방도로 건설 지원사업의 영향력 평가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개선된 도로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지역 소득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교통은 경제 활성화 또는 경제활동 기회 제공 등의 간접적인 고용효과 이외에도 도로 건설·유지보수 인력, 비공식적인 대중교통 운영자³⁾ 등 직접고용 효과 역시

1) Coşar, Demir (2016); Escobal, Ponce (2002); Kumari, Sharma (2017); Pradhan, Bagchi (2013); Sharma, Vohra (2009)

2) Mu, Van de Walle (2011)

가지고 있다.⁴⁾ 특히 비공식적인 대중교통 운영자는 공식적인 대중교통 체제를 갖추기 어려운 개도국 도시의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이동에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⁵⁾

따라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교통인프라의 확장과 개선은 개발과 직결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이 항상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은 SDGs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교통 분야의 중요성은 17개 SDGs 중 8개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⁶⁾

기후변화는 도로의 지속가능성과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SDGs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도로의 지속가능성 측면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폭한, 폭서, 강수량의 급격한 증가 등)가 교통 인프라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 인프라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향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 릭샤, 오토릭샤, 미니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됨

4) 유엔 인간주거 계획(United Nations programme for human settlements, 이하 Un-Habitat) (2013); Vaidya, K. G. (2017)

5) Un-Habitat (2013)

6) Partnership on Sustainable, Low Carbon Transport(이하 SLoCaT) (2018)

〈그림 1〉 SDGs 중 직간접적인 교통 목표



출처: 강경재(2018)

2. 기후변화 적응과 교통인프라

교통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⁷⁾로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반면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모든 교통 인프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인프라 유실과 운영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⁸⁾ 가중된 인프라 유실 및 손실은 개도국의 심각한 교통 인프라 부족 상태를 악화시키고, 개발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⁹⁾

7) Dalkmann, Brannigan (2007);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 (2018)

8) Asariotis et al (2018);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2013)

9) Asariotis et al (2018)

〈표 1〉 기후변화가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도로	철도	항만 및 수로	공항
기온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 손상 가속 • 해빙으로 인한 도로 토대 손상, 좌굴 • 유지보수 비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로의 팽창 및 좌굴 • 철도 전기 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의 과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및 교량 접합부 열팽창 • 상승한 온도로 인한 냉장 시설의 이용 증가로 인한 전력 소모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주로 아스팔트 손상 가속 • 공기 밀도 저하로 인한 활주로 길이 부족
강수량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침수 • 도로 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로와 역의 침수 증가 • 선로 지반 (ballast)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침적물로 인한 항로 봉쇄 • 수면 저하로 인한 항해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한 여행 중단 • 유실로 인한 공항 인프라 손실
해수면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통로 및 터널 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에 위치한 활주로 유실
폭풍 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인프라의 일시적인 손상 및 접근성 저하 • 침적물로 인한 인프라의 폐쇄 및 인프라 손상 			

출처: USAID (2013)

도로는 건설 이후 점진적인 온도변화는 물론, 폭우 등 극단적인 날씨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¹⁰⁾

10) Transport & ICT (2015)

〈그림 2〉 기후변화와 교통 인프라의 수명



출처: Transport & ICT (2015)

아시아는 도로 포장률이 약 79%로 높은 편이나, 도로 품질이 열악한 도로가 많다.¹¹⁾ 한편 아프리카의 경우 아직 비포장도로가 전체 도로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포장률이 낮으며, 도로의 절대적인 길이 역시 부족하다.¹²⁾ 기후변화로 인한 도로 유실과 표면 손상은 현존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을 높여 수원국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은행은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도로 설계 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장치(기초 공사 강화, 배수 시설 등)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도로 손상 복구비용의 상당부분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³⁾ 에티오피아의 경우 실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공사비 증가는 같은 기간 약 80-90백만 불인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홍수로 인한 피해액의 약 20% 정도로,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도로의 기후변화 적응시설은 도로 인프라를 보호하여 유지관리 비

1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이하 OECD) (2018)

12) OECD (2018)

13) Transport & ICT (2015)

14) Arnold et al (2018)

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교육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 시설을 갖춘 도로 인프라는 비도시 주거 인구가 발전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며 SDGs의 지표 9.1.1 ‘모든 계절에 이용가능한 도로의 2km 이내에 거주하는 비도시지역 주민의 비율’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¹⁵⁾

III. 공적원조의 교통인프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패턴 분석

1. 리오마커 상의 기후변화 적응지원 패턴

기후변화는 인류 공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적 원조는 지속적인 재원 충당(유상)과 필요한 연구에 대한 투자(무상)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표 2).

15) United Nation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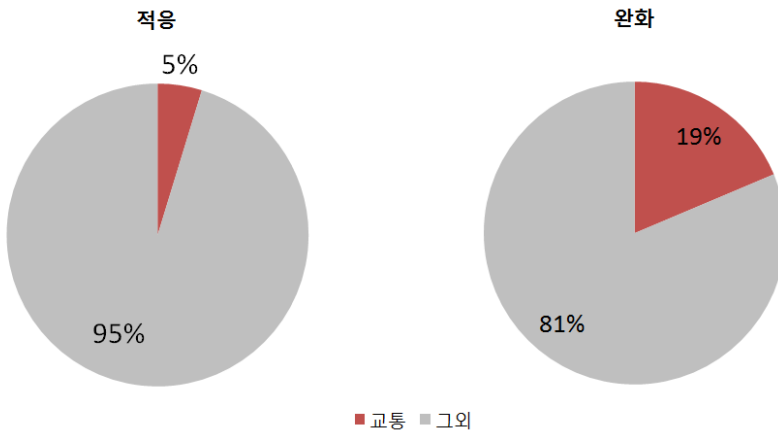
〈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의 장단점 비교

자원	장 점	단 점
국가기후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여국/공여자들에게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제시하여 지원동기 유발 • 국가의 기후변화 아젠다에 대한 주인 의식 고무 •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벌주의/부정부패에 취약 • 대부분의 국가기후기금은 파일럿 상태에 고착되어 있음 • 인력의 역량이 필요함
탄소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부문을 자극하고 경제 발전을 장려 • 국가의 개입이 없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지속가능성 • 탄소시장으로는 국가 역량강화를 이룩하기 힘들 • 탄소배출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함 • 참여자들의 높은 거래비용 발생
양허성 차관/비양 허성 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재정부의 원조 운영경험 활용 • 국제 자원의 상당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실한 전략적 접근의 부재 • 공여국 과밀현상 •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계획성 저하
다자/양자 무상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정부담 없음 • 무상원조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련된 기술적·경제적 연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공여국 내 무상원조에 대한 정치적 어려움 존재 • 기후 우선과제 지원을 보장할 수 없음
채무상계 (Debt swa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정부담 없음 • 환경채무상계를 통해 장기 프로젝트 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상계 실행가능성은 적절한 양자 채무의 가용성에 달려있음 • 집행 특성 상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계 필요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필요한 고위험 분야의 프로젝트 개발 장려 • 재무부는 이를 이용하여 우발채무 개선을 위한 국제 자원에 접근 가능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채무 증가 • 재정적자 • 지열발전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 역량이 필요함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출에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여 당면 과제 해결 • 장기 재정부실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축재정 상태에서 높은 보험료 부담 • 비용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산 및 재정 프레임에 포함하기 어려움

출처: Meirovich et al (2013)

정확히 얼마나 되는 재원이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리오마커를 통해 공적 지원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리오마커 통계 해석 결과 2010-2017년까지 개발재원을 이용한 기후변화 지원 중 교통 분야에 지원은 평균 약 18% 정도로, 전체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원을 적응과 완화로 나누어 분석하면 교통 분야의 지원은 완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그림 3〉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내에서의 교통 분야 지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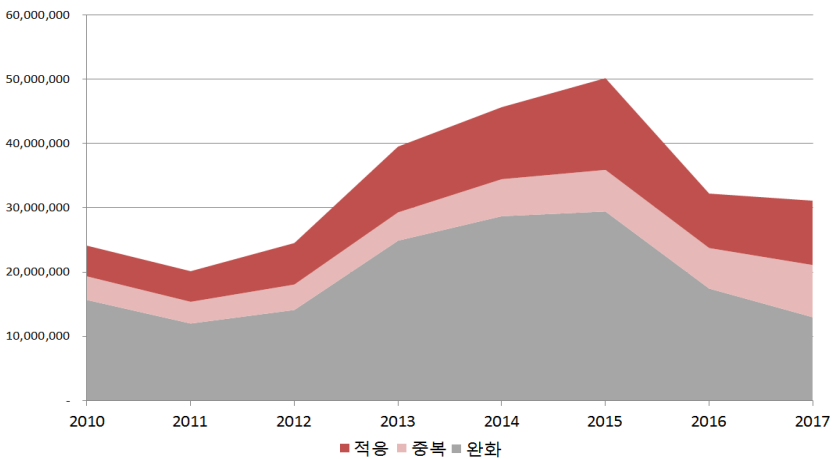
출처: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부 학자들은 완화에 주력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점차 적응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¹⁶⁾ 실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반적인 기후변화 지원에 있어 적응 대 완화의 비율에서 적응이 서서히 증가하는

16) Huq & Reid (2004)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4).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는 완화 사업에서 적응으로 사업의 내용이 변화하고, 선진국의 도의적인 책무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⁷⁾

〈그림 4〉 기후변화 대응 내 적응과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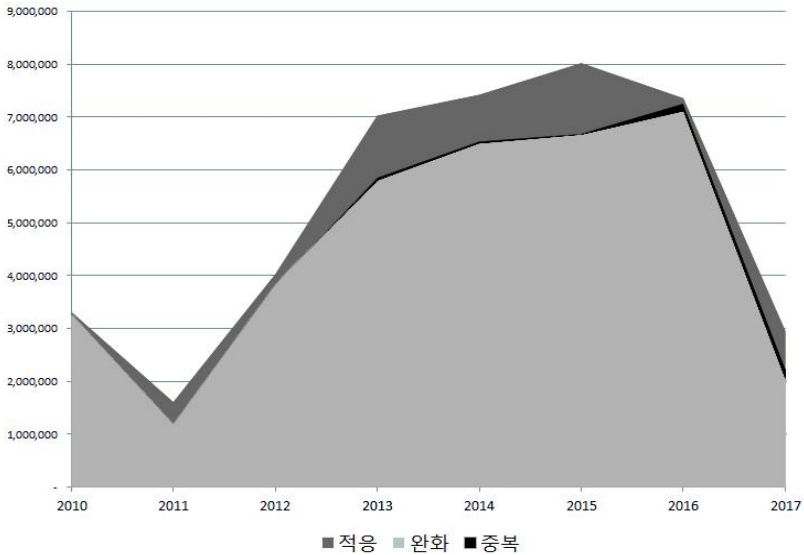
출처: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러나 교통 분야의 경우 아직 이러한 경향은 관측되고 있지 않다. 교통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은 2010-2017년 사이 1-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방향성 보다는 연도별로 크게 지원액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17) 강경재(2015)

이것은 기후변화 완화에 주력하고 있는 철도에 대한 지원액이 이 기간 동안 전체 교통 분야 기후관련 지원액의 60% 정도인 것과 관련성이 크다. 철도 부문의 경우 도로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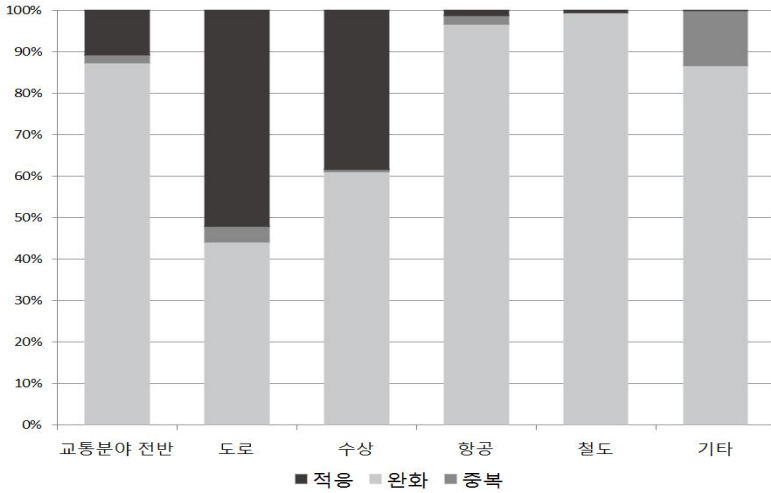
〈그림 5〉 교통 분야 내 적응과 완화



출처: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교통 분야 중 적응의 주요 지원대상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조건에 악영향을 많이 받는 도로교통과 수상교통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6).

〈그림 6〉 교통 분야 지원 내 적응과 완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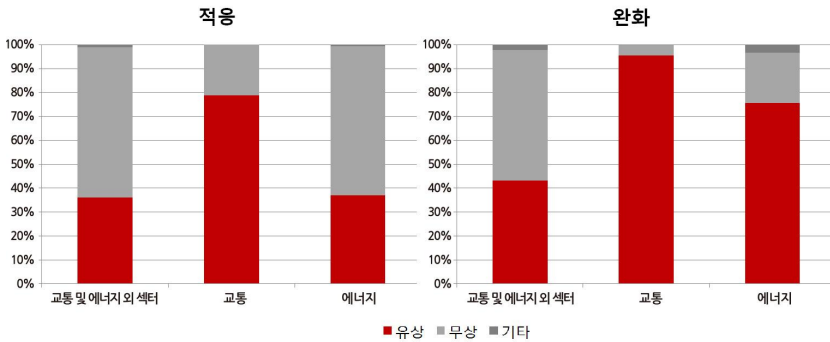


출처: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보통 적응에 대한 지원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교통 분야의 경우 적응 역시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그림 7). 이는 교통 분야의 특성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활발히 원조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원조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은 적응에서도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분야로, 교통분야의 적응은 인프라 건설, 보수, 개선 등 대규모 지원이 요구된다. 통상적인 원조에서 하드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주로 유상원조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향이 기후변화 지원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분야 별 유무상 비율 - 적응 vs. 완화



출처: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공여국 지원 사례: 일본의 교통인프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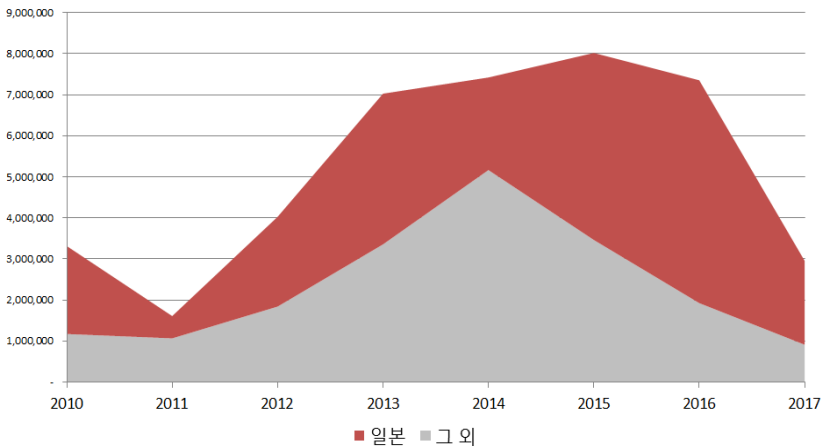
일본은 교토의정서 발표 등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일본의 개발협력 현장에도 공헌된 목표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시키는 등 국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기후변화 관련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일본은 기후변화 개발지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큰 공여국이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일본은 기후변화 재원 지원방안(Actions for Cool Earth: ACE) 2.0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1.3조 엔에 달하는 공공 및 민간 기후변화 재원을 약속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는 기후변화 협력전략(Climate Change Cooperation Strategy)을 수립¹⁸⁾하였다.

18) JICA (2016)

기후변화 재원의 분야별 지원 추세는 거의 일본의 재원 동원 추세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일본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완화와 적응 모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기후변화 관련 교통관련 공적 지원액 중 평균 50%이상이 일본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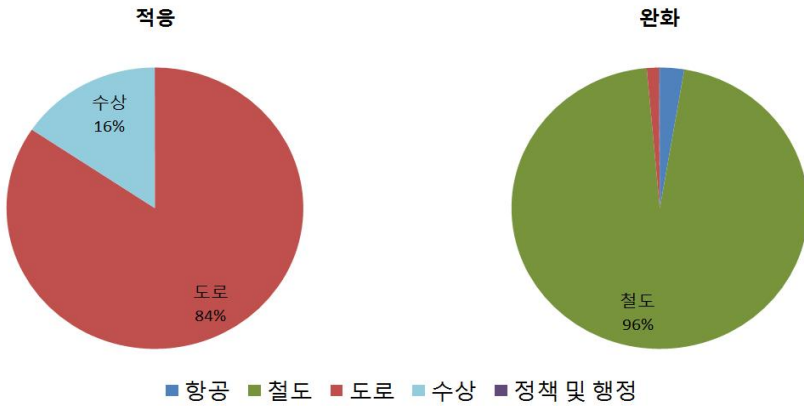
〈그림 8〉 교통 분야 기후변화 관련 지원액 추세



출처: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본의 지원을 교통 분야 내 세부항목별로 분석하면 완화 지원에서는 철도사업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적응 지원에서는 도로분야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9〉 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교통 분야 지원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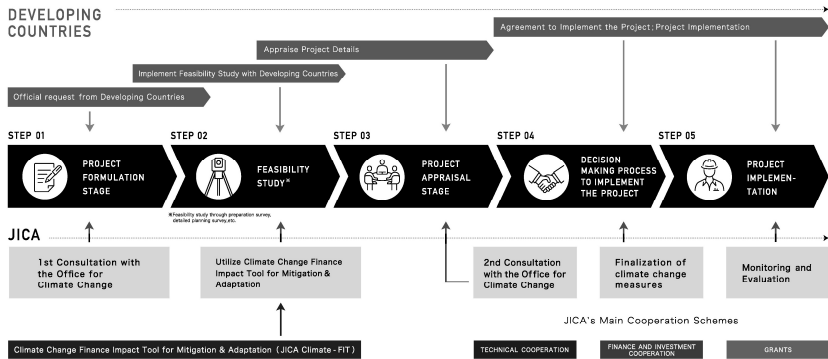
출처: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JICA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사업을 위해 기후변화 사업 설계 및 시행 매뉴얼의 성격을 가진 JICA Climate FIT(Finance Impact Tool)을 개발하여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¹⁹⁾ JICA Climate FIT은 완화와 적응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에 적용된다. 이 중 적응 매뉴얼은 기후 위험을 평가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접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9) JICA (2011)

〈그림 10〉

JICA 기후환경 주류화



출처: JICA (2018)

IV. EDCF 인프라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요소

1. EDCF 지원 국가 현황과 기후 취약국

EDCF 지원 대상 국가 중 상위 10개국 중 6개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반면 이들 국가의 국가협력전략 상에 나타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내용은 지역개발과 수자원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범분야 또는 사업의 환경 요소로 작용하여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다(표 4).

〈표 3〉 EDCF 지원 상위 10개국의 기후취약성

EDCF 지원 순위*	국가명	CRI ²⁰⁾ 순위**
1	베트남	6
2	방글라데시	7
3	필리핀	5
4	캄보디아	19
5	스리랑카	31
6	인도네시아	69
7	미얀마	3
8	라오스	89
9	탄자니아	126
10	우즈베키스탄	152

출처: * 2017 EDCF 연차보고서

**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9

〈표 4〉 EDCF 지원 상위국 중 기후취약국가에 대한 CPS 내 기후변화관련
섹터 전략

국가	기후변화 관련 섹터 전략		기타
베트남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
방글라데시	-	-	개발환경에 명시
필리핀	지역개발 분야	기후변화적응 및 재난위험 경감요소 적용을 통해 농·어민의 이해도 제고 및 대비능력 강화	개발환경에 명시

20) Climate Risk Index란 날씨관련 재해(태풍, 홍수, 폭서 등)로 인해 국가와 지역이 입을 피해를 사망자와 재산 피해 등을 분석하여 작성된 인덱스로, 기후관련 취약성과 이에 대한 노출 정도를 바탕으로 값을 도출한다. 랭킹이 높을수록 기후관련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덱스의 랭킹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은 아니나, 기후관련 취약성을 측정하는 참고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	기후변화 관련 섹터 전략		기타
캄보디아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식량안전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 개선 및 관련 역량강화에 중점	개발환경에 명시
미얀마	-	-	개발환경에 명시
스리랑카	지역개발 분야	통합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경험 및 분리수거제도 등 수원국과 공유 가능한 개발 경험이 풍부하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	개발환경에 명시

출처: 국별협력전략(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²¹⁾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24개국 중 교통분야를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한 국가는 모두 17개국이나, 이 중 교통분야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는 2개국으로 모두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표 5). 이는 국내도로 시설의 기후변화 적응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표 5〉 국가협력전략 상의 중점분야 및 기후관련 지원내용 분야

국가명	중점분야				기후변화관련 지원목표
	교육	보건	에너지	지역개발	
가나	교육	보건	에너지	지역개발	에너지
네팔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지역개발	지역개발
라오스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지역개발	-
르완다	교육	지역개발	통신		-
모잠비크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

21) 대한민국정부(2016)

국가명	중점분야				기후변화관련 지원목표
	공공행정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몽골	공공행정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
미얀마	공공행정	교통	에너지	지역개발	-
방글라데시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통신	-
베트남	공공행정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물관리 및 보건위생
볼리비아	교통	보건위생	에너지	지역개발	-
세네갈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및 수산업	지역개발, 물관리
스리랑카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지역개발
아제르바이잔	공공행정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통신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티오피아	교육	교통·에너지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지역개발
우간다	교육	보건위생	지역개발		지역개발
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인도네시아	공공행정	교통	물관리	환경보호	환경보호
캄보디아	교육	교통	농촌개발	물관리 및 보건위생	물관리 및 보건위생
콜롬비아	교통	산업	지역개발	평화	교통 분야(저감), 지역개발분야
탄자니아	교육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에너지
파라과이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통신	-
파키스탄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지역개발	-
페루	공공행정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환경보호	교통 분야(저감), 환경보호
필리핀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재해예방	지역개발	재해예방, 지역개발

출처: 국별협력전략(24개국)²²⁾

이러한 경향은 EDCF 지원에서도 나타난다. 도로를 포함한 교통 분야가 전체 개발사업 차관 지원 중 약 38%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기후변화 지원은 2010-2017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표 6). 이는 일본의 교통 분야 지원액 중 59%가 기후변화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²³⁾

〈표 6〉 EDCF의 2010-2017년 기후변화 관련 지원 분야 및 지원액

분야	완화	적응	중복
식수 및 위생	-	658,747	-
에너지	103,475	63,478	63,478
농업	-	93,341	-
환경보호(일반)	60,023	145,118	60,023
합계	163,498	960,685	123,501

출처: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EDCF 도로분야 기후변화 적응 지원 및 개선 방안

기후변화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저개발국이 피해복구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따라서 교통 분야를 지원하는 공여국은 지원 결정 시 도로의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DCF 사업에서 도로는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배수시설 등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 시설을 갖추었다. 이에 더해서 기후변화 적응과

22) 대한민국정부(2016)

23) 강경제(2018)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개발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의 파데니아-아누라다푸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기후 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유실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다. 이후 본 도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도로높이를 상향조정하고 포장구조를 변경하였다.²⁴⁾

EDCF 도로 분야 지원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심사 중인 캄보디아 기후탄력적 농촌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는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매년 홍수로 인해 지방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농촌주민의 삶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지역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기후변화 전략(2014-2028) 상에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한 지방도로 인프라 개보수를 통한 지역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선정하였다. EDCF는 본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6개 주 지방도로의 개보수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로의 침수 예방 시설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대로 도로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극단적인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적응’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²⁵⁾ EDCF 내의 도로분야 지원 비율, 협력 대상 국가들의 기후취약성, 세계적인 원조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적응 요소는 각각의 사업 내에서 고려하기보다 도로 인프라에서 주요 요소의 하나로

24) 한국수출입은행(2015)

25) Ebinger & Vandycke (2015); Arnold et al (2018)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EDCF의 도로분야에서 아직 기후변화 적응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현상은 우리나라 ODA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주류화 애로요인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2017년 시행된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에서는 리오마커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EDCF 중점 고려항목 내 기후변화 미포함으로 인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를 지적하였다.²⁶⁾ 도로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의 주력 사업인 에너지나 철도와 달리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을 조명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후위험 체크리스트의 도입과 구체적인 리오마커 활용지침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에 EDCF는 최근 리오마커를 비롯한 정책마커의 활용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좀 더 적절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원 시 고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로분야가 기후변화 적응의 한 방안이라는 내부적인 인식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에 교통 분야 중 기후변화 적응이 우선 시 되는 도로 및 항만교통 시설 지원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심사 시 반드시 기후변화 요소 포함 여부 및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JICA Climate FIT처럼 검토에 적절한 가이드라인 개발 역시 이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 정지원 외(2017)

이는 또한 수원국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적응 수요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EDCF 도로분야는 기본적으로 배수 및 사면 정리 등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자연재해,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및 홍수에 대비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수원국 또는 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는 파트너 기관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수원국이 요구하지 않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검토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면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도로는 사회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도로 인프라 건설과 함께 유지보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JICA, 세계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EDCF는 교통분야를 주요 섹터로 인식하고, 특히 도로분야에 많은 지원을 시행하여 왔다.

2017년 ODA 전반에서 시행된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결과와 타 공여기관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EDCF의 도로분야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는 EDCF는 수원국 또는 파트너 기관의 방침을 반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다소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 분야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방안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로 분야에서의 적응 필요성을 공감하고, 일본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응 방안 도입 여부 및 필요한 적응 기제 등을 선택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도로 사용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반작용 역시 적응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비동력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활용, 도보 편의 중심의 도로 설계,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와 이륜차 등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네팔의 전기 택시 도입, 베트남 하노이의 도심투어를 위한 전기카트 도입, 싱가포르의 전기차 도입 정책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²⁷⁾

구체적인 적응기제 도입 방안과 도로 시설 이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응과 완화 사이의 균형 발전이 고려된 도로분야 지원을 통해 향후 EDCF 도로분야 지원의 개발효과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이하 UNESCAP) (2017)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경재 (2015). DAC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시사점. EDCF Issue Paper. 4(2). 한국수출입은행.
- 강경재 (2018). SDGs 하에서의 교통분야 ODA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2018(4), pp.73-108. 한국수출입은행.
- 대한민국 정부 (2016). 국가협력전략(가나, 네팔, 라오스, 르완다, 모잠비크, 몽골리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볼리비아, 세네갈,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정지원 외 (2017).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2015). 스리랑카 파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 개선사업 사후평가.
- 한국수출입은행 (2018). 2017 EDCF 연차보고서.

해외문헌

- Arnold, K. et al (2018). Climate adaptation: Risk management and resilience optimisation for vulnerable road access in Africa. Management of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L Ethiopia: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 Paige-Green Consulting (Pty) Ltd and St Helens Consulting Ltd.
- Asariotis, R., Benamara, H., & Mohos-Naray, V. (2018). Port industry survey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UNCTAD/SER.
- Coşar, A. K., Demir, B. (2016). Domestic road infrastructure and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Turke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 Dalkmann, H., Brannigan, C. (2007). Transport and climate change: module 5e.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 Eckstein, D., Hutfils, M., & Wings, M. (2018).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9. Germanwatch, Bonn.
- Escobal, J., Ponce, C. (2002). The benefits of rural roads: Enhancing income opportunities for the rural poor.
- Huq, S., & Reid, H. (2004). Mainstreaming Adaptation in Development. *IDS Bulletin*, 35(3), pp.15-21.
- IEA (2018).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JICA (2011). JICA climate-FIT.
- JICA (2015) JICA Climate Change Cooperation Strategy.
- JICA (2018). JICA's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Towards a Sustainable and Zero-carbon Society.
- Kumari, A., Sharma, A. K. (2017). Infrastructure financing and development: A bibliometr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 Meirovich, H., Peters, S., & Rios, A. R. (2013). Financial instruments and mechanisms for climate change program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Division: Washington, DC, USA.
- Mu, R., Van de Walle, D. (2011). Rural roads and local market development in Vietnam.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 OECD (2018). Enhancing connectivity through transport infrastructure: the role of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and private investment. DCD Working Paper.
- Pradhan, R. P., Bagchi, T. P. (2013). Effec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n economic growth in India: the VECM approach.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 Sharma, A. K., Vohra, E. (2009). Critical evaluation of road infrastructure in India: a cross-country view.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Management*.
- SLoCaT (2018). 2018 Voluntary National Review : Showcasing the critical role of the transport sector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Transport & ICT. (2015). Moving Toward Climate-Resilient Transport: The World Bank's Experience from Building Adaptation into Programs. Washington DC: World Bank.

- Twerefou, D. K., Chinowsky, P., Adjei-Mantey, K., Strzepek, N. L. (2015). The economic impact of climate change on road infrastructure in Ghana.
- UN. (2017).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6 July 2017. Work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pertaining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1/313
- UNESCAP. (2017). Review of developments in transport in Asia and the Pacific 2017.
- Un-Habitat. (2013). Planning and design for sustainable urban mobility: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2013. Taylor & Francis.
- USAID (2013). Addressing Climate Change Impacts on Infrastructure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 Vaidya, K. G. (2017). Review of impacts on roads sector investments on employment (No. 994971391402676).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온라인 자료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_SetCode=CRS1) (검색일: 2019.5.21.)

EDCF

I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자호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조사역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자호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조사역

목 차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2. 사회동향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1. 국가개황

1. 일반개황

면적	331천 km ²	GDP	2,414.34억 달러
인구	94.58백만 명(2018기준)	1인당 GDP	2,552.82 달러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Dong
대외정책	미국·중국과 균형외교	환율(달러당)	23,012.20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의 도입에 따라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30여 년 간 경제규모가 15배나 커졌음.
- 베트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및 정치적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며,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치면에서는 그간 당서기장·총리·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주석직을 겸하게 되었으며, 부정부패 척결 및 국영기업 개혁 등의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12.22. 수교 (북한과는 1950.1.30.)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무역협정(1993), 투자보장협정(1993), 항공협정(1993),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과학기술협정(1995), 원자력협정(1997), 사증면제협정(1999), 기술협력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09)

〈표 1〉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주요 품목
수 출	32,630,457	47,753,839	48,628,51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수 입	12,495,154	16,176,992	19,631,653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

-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9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6,062건, 19,818,777천 달러

○ 한국은 대 베트남 FDI 최대 투자국으로서 베트남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

- 1988년부터 2018년 12월 20일 까지 누적 집계된 국가별 대 베트남 FDI 투자 통계(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규모는 7,459건, 625.7억 달러(전체 투자금액 대비 18.3%)로 최대 투자국임.
-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분야는 제조업(73%)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부동산업(14%), 건설업(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6.0	6.7	6.2	6.8	7.1
소비자물가상승률	4.1	0.6	2.7	3.5	3.8
재정수지/GDP	-6.3	-5.5	-4.8	-4.5	-4.6

출처: IMF, EIU, 베트남 통계청

○ 내수소비 증가,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세 지속

- 베트남 경제는 2017년 전자·섬유 등 제조업 수출 증가세 지속, 외국인투자 확대 등으로 6.8%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수출 증가,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7.1%의 성장을 시현하여 정부 목표치(6.7%)를 상회함.
- 2018년 1~3분기 실질GDP성장률은 6.9%를 기록하였으며, 4분기에는 7.3%로 성장세를 이어감. 2018년 GDP 성장의 부문별 기여도는 농·산림·어업 8.7%, 건설·제조업 48.6%, 서비스업 42.7%로 집계됨.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
 - 베트남은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원자재 및 곡물 국제가격, 동화(Dong)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상승,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로 전년(2.7%)대비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2017년 말 전기요금 인상 효과의 지속,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3.8%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목표치(4%)이내 수준임. 2019년에도 상품 국제가격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0%로 상승할 전망이다.

- 인프라 및 복지비용 등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원유생산 등 세수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각종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7년 재정수지는 인프라 부문 지출 등으로 인해 관세수입 증가와 조세징수 개선 등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를 기록하였음. 2018년에도 인프라 개발 및 정부부채 이자 지급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GDP대비 -4.6% 수준의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 대외거래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9,074	-119	5,924	5,401	5,225
경상수지 / GDP	4.9	-0.1	2.9	2.5	2.2
상 품 수 지	12,126	7,396	14,013	11,495	10,180
상 품 수 출	150,217	162,112	176,632	214,135	240,629
상 품 수 입	138,091	154,716	162,619	202,640	230,449
외 환 보 유 액	34,189	28,250	36,527	49,076	54,053
총 외 체	70,600	78,200	89,400	108,400	121,000
총외채잔액/GDP	38.0	40.8	44.4	49.2	50.2
D.S.R.	3.4	3.8	3.6	4.8	4.7

출처: IMF, EIU, OECD

-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실적 개선으로 무역수지 흑자 시현
 -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수출 및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각각 13.8% 및 11.5% 증가하였음. 특히 휴대전화·의류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실적 호조로 인해 무역수지가 7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는 GDP 대비 2.2%의 흑자를 시현함.
- 총수출 및 수출증가율의 증가세 지속
 - 수출 호조에 따라 총수출은 GDP 대비 2014년 86.9%에서 2018년 106.8%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였음. 총수출증가율도 2016년 16.9%에서 2017년 29.1%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19.3%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함.

3. 외채상환능력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세
 -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191억 달러(집행 기준)로 증가하였고,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2018년 말 541억 달러 규모로 2017년 말(491억 달러) 대비 약 10%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액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인해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3개월분 내외로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7년 말 46.8%에서 2018년 말 42.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III. 경제구조 및 정책

1. 구조적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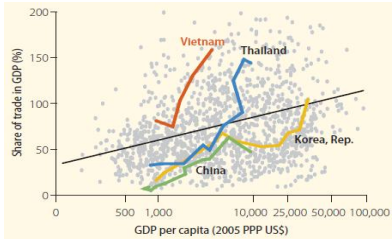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8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조사 대상 140개국 중 75위로, 특히 항만(78위)/전기공급(87위)/항공(101위)/도로(107위) 부문이 취약함.

- 도로·통신·편의시설 등 인프라 환경의 열악함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대도시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GDP의 9~10%를 인프라 환경개선에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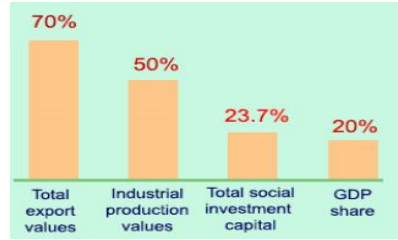
2. 성장잠재력

- 꾸준한 수출지향적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수출 지속 확대
 - 2018년 베트남으로 유입된 FDI 규모는 191억 달러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음. 2019년 1월 유입된 FDI 규모도 15.5억 달러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으며, 하노이·호치민·하이퐁 등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베트남은 무역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이며, 휴대폰 및 부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 경제는 외국 기업이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재수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1988년 베트남이 FDI의 본격 유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FDI는 GDP의 20%, 총 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



베트남 경제내 FDI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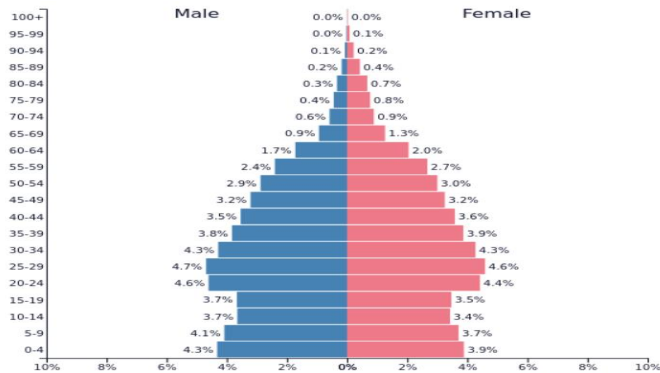


* 출처: Worldbank, 베트남 기획투자부 * 출처: 베트남 기획투자부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구 1억 명에 이르는 소비시장 성장 기대

- 30세 미만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인구구조와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정부는 2025년이면 총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함.
- 산업 발전에 따른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동산 등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연령대별 인구 비중(2016년 기준)



3. 정책성과

- CPTPP 비준안 국회 통과 (2018년 11월)
 - 베트남 국회는 2018년 11월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에 대한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CPTPP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기존의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대하여 발효됨.
 - 베트남은 전 세계 GDP의 14%, 무역액의 15.2%를 차지하는 CPTPP를 통해 자국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전략’에 관한 결의안 채택 (2018년 10월)
 - 베트남은 총 3,26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100만km²에 이르러 해양개발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임.
 - 제12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동 결의안에서 2045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성장을 통해 강력한 해양기반 경제로 베트남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함.
 - 해양경제 부문은 2030년까지 베트남 GDP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안 지역 28개 도시 및 지방은 GDP의 65~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유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 도모

- 베트남 정부는 국유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유기업을 2016년 기준 583개에서 2020년까지 103개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 말까지 147개의 국유기업을 민영화하여 성과가 다소 부진한 상황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구조개혁에 대한 거부감은 정부의 목표 달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은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 등 금융부문의 구조 개혁

- 2017년 8월 시행된 'Resolution 42'를 통하여 대출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은행의 담보자산 처분 절차가 신속해짐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또한 은행권의 합병을 도와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은 은행이 소규모 은행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적 개혁을 도모함.
- 베트남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은 2018년 말 1.9%를 기록하여 2016년 2.5% 및 2017년 2.0%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2018년 초 정부가 발표한 'Resolution 01'는 2019년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IV.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18년 10월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권력집중 우려
 -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으며, 제12차 공산당 전당대회('16.1월)에서 평화적 지도부 교체에 성공함.
 - 2018년 9월 21일 쩌 다이 꾸엩(Tran Dai Quang)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응유옌 티 도안(Nguyen Thi Doan) 부주석이 일시적으로 대행하면서 정권 승계와 관련하여 정치적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10월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하게 되었음.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며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함.
 - 공산당 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대세력이 미약하여 상당 기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동향

○ 2019년 1월부터 사이버안보법 발효

- 베트남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점차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베트남은 금번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인해 '전제주의적 정보 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6월 일시적인 반중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 베트남 정부가 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장 99년 간 토지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에 특혜를 부여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하노이·호치민 등에서 반중 시위가 발생하였음.
- 금번 시위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 따른 반중 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동남부 지역의 빈투언(Binh Thuan) 성에서 100여명을 체포하는 등 베트남 당국의 강경대응에 따라 대규모 소요사태로 번지지 않음.

- 베트남에서 범죄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의 절도·소매치기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대규모 형태의 시위는 거의 없는 편이며 치안은 대체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3. 국제관계

○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접국들과의 유대관계 추진 지속

-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캄보디아에서는 이주 문제로 인한 갈등 등으로 인해 베트남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음.

* 2017년 10월 캄보디아 정부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대부분 베트남인)에 대한 엄중 단속을 선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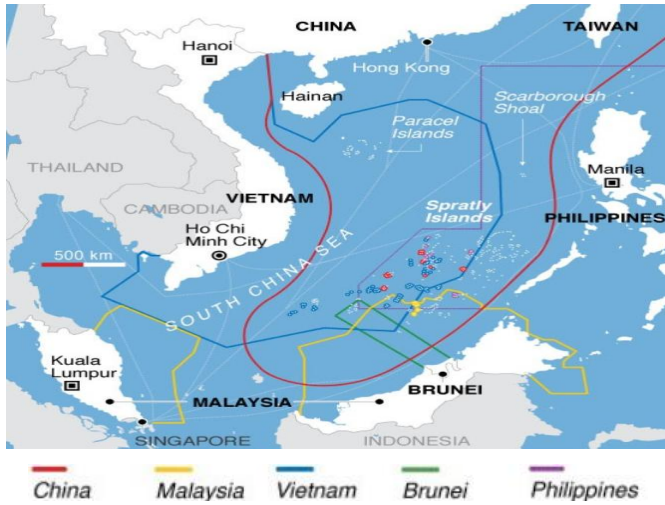
- 베트남은 라오스와 양국 지도자 간의 정치·경제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인식 공유 등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2010년 라오스에 대해 중부 지역 하띤(Ha Tinh) 성에 위치한 봉앙(Vung Ang) 항구 운항을 50년 간 허가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인 라오스의 바닷길을 열어주었음.

○ 중국과는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분쟁 지속

- 베트남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동일 사안으로 역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과는 달리 중국과의 갈등을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해 왔음.

- 2018년 4월 베트남-중국 외교부 장관들 간에 남중국해 공동 개발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는 등, 군사적으로 월등하게 우월한 중국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일본·인도 등과 안보 동맹 강화 추진
 - 베트남은 해양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일본 군함의 감란(Cam Ranh) 만 기항을 허용하고, 일본·인도·호주와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문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인도 등과의 동맹을 통해 지역 내 안보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정부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에 베트남이 지닌 중요성을 인지하고 베트남을 동 지역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로 대하고 있음.

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등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총외채의 약 83.5%가 중장기 차관으로 구성되어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D.S.R도 4%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임.
 - 한편, 2018년 9월 말 기준 베트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액은 단기 16억 달러, 중장기 98억 달러 등 총 114억 달러이며, 이중 미회수채권은 중장기 190만 달러(0.02%)에 불과하여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한 편임.

- 충분한 외환보유고 유지로 대외지급능력 양호
 - 2018년 말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경상수지 흑자 시현 등으로 인해 전년 말(491억 달러) 대비 증가한 541억 달러로 추정됨. 이는 단기외채 잔액의 2.1배 수준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국제시장평가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8.06)	5등급 (2017.06)
Moody's	Ba3 (2018.08)	B1 (2017.04)
Fitch	BB (2018.05)	BB- (2017.05)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2018년 중 신용등급 상향 조정
 - 2018년 5월 Fitch는 높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 (BB- → BB), 동년 8월 Moody's도 경제성장 지속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함(B1 → Ba3).

VI. 종합의견

- 베트남은 최근 연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고, 특히 2018년에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호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11년 만에 최고치인 7.1%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 내수시장 활성화, 국영기업 개혁, 은행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 중임.

- 공산당 1당 체제 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한 상황에서 2018년 9월 쯤 다이 팡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2018년 10월 응우옌 푸 쯩 공산당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됨.

- 젊은 인구구조 및 풍부한 노동력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ASEAN 내 주요 제조업 중심지로서 수출 확대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경제성장세 지속의 영향으로 베트남 대도시 주민들의 구매력이 상승하여 민간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등 하방 리스크 요인도 상존함.

- 우리나라는 베트남에게 해외직접투자(FDI) 최대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ASEAN 지역 내 거점 중심지로서, 양국 모두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임.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목 차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2. 사회동향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I. 국가개황

1. 일반개황

면적	447천 km ²	GDP	412.41억 달러
인구	32.657백만 명(2018기준)	1인당 GDP	1,262.86 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om
대외정책	서방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유지	환율(U\$기준)	8,339.55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2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1.1조 m), 원유(6억 배럴), 우라늄(6만 5,600톤), 금(1,700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에너지, 광물, 금, 면화 등 주력산업인 자원에너지 부문과 농업 부문의 발전,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을 통한 가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88.6%의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자유화, 환율제도 개혁, 외환 자유화 추진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에너지 플랜트 부문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내륙국이라는 취약한 지리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 운송망과의 연결을 통한 물류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후 주변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요 협력국가인 러시아, 중국과의 교역, 투자 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미국이나 EU 등 서방 국가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1.29. 수교 (북한과는 1992.2.7.)
-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8),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범공조조약('04), 사회보장협정('06),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9), 근로활동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이상 '12), 관광협력협정('13)

〈표 1〉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927,671	1,180,445	2,117,451	수송기계, 일반기계, 플라스틱
수 입	20,777	18,117	21,920	면사, 곡물

-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316건, 7억 700만 달러

(2019/05/22 현재)

구 분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액	대출잔액
수은대출(천달러)	8,998,897	8,190,617		1,300,882
경협기금(백만원)	353,672	179,063		133,021

정량평가 경제지표

종전 평가일 : 2018.04.11.

분야		평가요소	2014	2015	2016	2017	2018
I. 국내경제 (50%)		1인당 GDP(달러)	2,070	2,143	2,124	1,520	1,263
		소비자물가상승률(%)	9.1	8.5	8.0	12.5	17.9
		재정수지/GDP(%)	3.2	1.4	1.9	2.1	3.1
		GDP 규모(억 달러)	631	665	671	488	412
		실질GDP 성장률(%)	8.0	7.9	9.0	8.9	5.0
		국내총투자/GDP(%)	30.1	26.9	25.3	31.9	41.0
II. 국제 경제 (50%)	대외 거래 (25%)	외환보유액/ 월평균수입액(개월)	8.9	10.6	10.2	8.9	6.4
		경상수지/GDP(%)	1.4	0.7	0.4	3.0	-8.7
		총수출증가율(%)	0.1	-4.5	-13.8	17.6	15.4
		총수출/GDP(%)	24.6	22.3	19.0	30.7	42.0
	외채 상환 능력 (25%)	총외채잔액/총수출(%)	85.8	100.0	127.6	118.0	103.9
		D.S.R.(%)	6.4	4.1	5.2	12.6	14.0
		총외채잔액/GDP(%)	22.1	22.3	24.3	36.3	43.6
		단기외채잔액/ 외환보유액(%)	5.5	7.9	5.9	11.0	8.4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8.0	7.9	9.0	8.9	5.0
소비자물가상승률	9.1	8.5	8.0	12.6	17.9
재정수지/GDP	3.2	1.4	1.9	2.1	3.1

출처: IMF, EIU

□ 세계경기 침체와 경상수지 적자 전환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 2014~17년 동안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우즈베키스탄은 세계경기 침체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 증대 등의 영향으로 5%의 경제성장률에 머물렀음.

-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지표들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및 주택, 에너지, 광물 등의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의 증대가 경제 성장을 지탱한 것으로 평가됨.

- 2019년에도 5%의 성장이 전망되며, IMF에 따르면 2020년에는 5.5%, 2024년에는 6%로 성장률이 다소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WEO. April 2019. p. 160)

□ 환율 상승으로 초래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지속

○ 2017년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환율단일화가 단행된 이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

- 환율단일화에 따라 연평균 달러당 솜화 환율은 2016년의 3,231 솜에서 2017년에는 8,120솜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더욱 상승한 달러당 8,339솜을 기록함.

○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9%를 기록하여 2017년의 12.6%를 상회하였음.

- 2018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소비재 가격 인상과 명목임금 25%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1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은행은 2017년 6월 환율단일화를 앞두고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증가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9%에서 14%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9월에도 환율 안정을 위해 16%로 추가 인상하였음.
- IMF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점차 안정되어 2020년에는 11.9%로 하락하고 2024년에는 7.5%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WEO, April 2019. p. 165)

□ 재정수지 흑자 지속

- 2018년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에너지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상승함.
-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2014년의 3.2%에서 2015년 1.4%로 하락한 후, 에너지 수출가격 상승에 따라 2016년 1.9%, 2017년 2.1%로 상승을 지속하여 2018년에 이르러 3.1%로 2014년의 수준을 회복함.

2. 대외거래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906	470	295	1,480	-3,577
경상수지/GDP	1.4	0.7	0.4	3.0	-8.7
상 품 수 지	-1,835	-797	-2,392	-2,216	-6,867
상 품 수 출	12,903	9,997	8,645	10,162	11,386
상 품 수 입	14,738	10,794	11,037	12,377	18,252
외 환 보 유 액	12,776	12,929	13,457	13,285	13,430
총 외 채	13,311	14,802	16,291	17,708	17,999
총외채잔액/GDP	22.1	22.3	24.3	36.3	43.6
D.S.R.	6.4	4.1	5.2	12.6	14.0

출처: IMF, EIU

□ 중간재 수입규모의 증가에 따라 2018년 경상수지 적자 전환

○ 투자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수입액의 증가로 경상수지는 GDP 대비 -8.7%의 적자로 전환됨.

-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액이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산업 현대화, 무역자유화 등의 영향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의 증가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음.
- 상품 수입액은 2017년 102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8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수입 규모도 2017년 41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52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18년 외환보유액은 134억 달러로 전년도와 유사

- 외환보유액은 2016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9월 기준 139억 달러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차 비중을 축소할 계획임.
 - 2019년 2월 중앙은행은 향후 금의 보유 비중을 축소하고 미국 국채 등 수익성 높은 외화채권 구입 계획을 발표하였음.

3. 외채상환능력

□ 총외채규모 다소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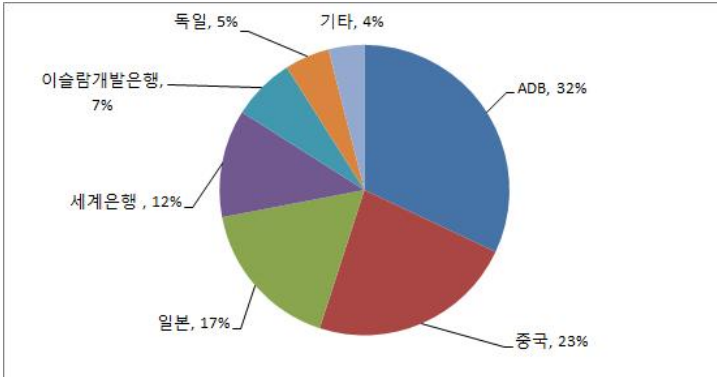
- GDP 규모 감소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43.6%로 증가함.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임.
(24.3%('16) → 36.3%('17) → 43.6%('18))

□ 대부분의 외채 관련 지표들은 안정적 수준 유지

- 2018년 기준 총수출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04%,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8.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GDP 대비 공공외채 비중(20%)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43.6%)은 상승 추세이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임. 공공외채의 57%는 ADB, 세계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며, 주요 채권국은 중국, 일본, 독일 등임.

우즈베키스탄 공공외채의 주요 채권국 및 기관



출처: Fitch Ratings

-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상승 추세이나 안정적 수준
 - D.S.R.은 최근 상승 추세이나, 역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D.S.R.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5.2%('16) → 12.6%('17) → 14.1%('18))이지만 유동성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는.

III. 경제구조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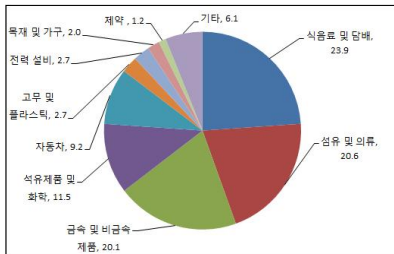
1. 구조적 취약성

□ 수출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

○ 가스, 면화, 금 등 원자재의 수출비중이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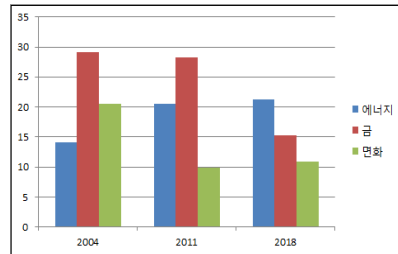
- 2018년 기준으로 3대 주요 원자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4%에 이룸.

제조업 부문별 비중(2017년)
(단위: %)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주요 수출품목(2018)
(단위: %)



출처: EIU

□ 제조업 발전의 취약성

○ 원자재 가공업이나 식품, 섬유 이외의 제조업 부문 발전이 취약하여 다수의 소비재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정부가 제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은 식음료, 섬유, 금속 등 몇몇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의 부족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20%인 260만 명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한국 등을 비롯한 해외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물류 환경의 취약성

- 이중 내륙국으로 운송 및 물류환경이 취약함.

우즈베키스탄의 물류지수(2018)

국 가	종합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우즈 베키스탄	99	140	77	120	88	90	91

출처: World Bank, International Logistics Performance Index(2018)

* 평가대상 160개국 가운데 순위.

2. 성장잠재력

□ 천연가스, 원유, 우라늄 등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 2017년 기준 천연가스 1.1조 m³,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과 각종 광물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수출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최대 수출품목인 천연가스는 2017년 기준 러시아로 67억 m³,

중국으로 34억 m³, 카자흐스탄으로 17억 m³ 등 118억 m³가 수출되었으며, 이는 2015년의 75억 m³에 비해 57%가 증가한 것임.

□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석유화학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

○ 향후 대규모 석유화학 및 화학 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슈르탄 천연가스 액화장치(GTL),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칸덤 가스처리 설비 등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2019~30년 화학 산업 투자유치 및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 121억 달러 규모의 31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5개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나보이, 지작, 수르한드리아 등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100MW 규모의 나보이 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2월부터 공개 입찰이 진행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성장률 유지

○ 2018년 기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2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인구는 1991년 독립 직후 2,060만 명에서 2000년 2,465만 명, 2010년 2,856만 명, 2015년 3,130만 명, 2018년 3,270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인구의 평균 연령이 28.6세로 낮은 편이며, 평균 수명은 73.8세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음.

□ 운송 및 물류 인프라 환경 개선 노력

-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제다자금융기구의 투자,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물류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19km에 달하는 캄치 터널의 건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 중국의 서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등의 성과가 있었음.
 - 기존의 국제다자금융기구인 ADB, WB, EBRD, IDB와 함께 새롭게 설립된 개발은행인 AIIB가 운송, 에너지 부문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3. 정책성과

□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 적극 추진

- 외환자유화, 환율제도 개혁, 무역자유화, WTO 가입 재개 추진 등이 개혁정책의 대표적인 성과임.

- 과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수출외환소득의 의무매각제 등을 폐지하고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등 외환자유화 정책을 실시함.
- 환율정책에서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이중환율제에서 단일 환율제로 전환하였으며,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12월 IMF의 데이터 보급 표준 시스템(Enhanced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e-GDDS)에 가입하여 2018년 5월부터 주요 경제 지표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통계청, 중앙은행, 재무부 간의 협력을 통해 통계 부문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등의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수입품의 국내유통 사전허가 제도가 완화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WTO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이후 WTO 가입협상을 중단하였으며, 2018년부터 가입협상을 재개하였음. 올해 2월 타슈켄트를 방문한 WTO 사무차장은 1~2년 내 가입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 2019년 2월 비자 면제 대상국에 45개국을 추가하였음.

- 2018년 2월 한국, 일본, 터키 등을 비롯한 7개국 관광객에 대해 30일 이내 체류시 비자 면제를 시행한 이후, 면제대상국을 확대하여 왔으며 2019년 2월의 조치로 전체 비자 면제 대상국은 64개 국가에 달하게 됨.

-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 개선 추세
 - 2019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190개국 가운데 76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5년의 141위(전체 189개국), 2017년의 87위(전체 190개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투자자의 권한 보호, 세제, 국경 통관 시스템 등의 부문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수출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구 설립과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수출 지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개발은행(Uzbekistan Development Bank)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1월 대통령령을 통해 기존의 국가투자 위원회와 대외무역부를 통합하여 대외무역투자부를 설립하였음.

□ 국제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추진

- ADB, EBRD, 세계은행, IDB 등과 공동으로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을 지원받고 있음.
 - ADB는 2019~23년 국가 파트너십 전략에 따라 상하수도, 교통 인프라, 전력보급, 일자리, 보건 현대화 등에 10억 달러의 지원을 추진함.

- EBRD는 2018~23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국영기업 민영화, 신재생에너지, 지방의 상하수도 사업 등의 부문에 지원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주로 지역 및 농촌 개발, 복지 지원,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의 분야에 지원하고 있음.
- IDB는 2018~21년 파트너십 전략에 따라 보건, 교육, 관개, 전력 등의 부문에 약 13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 관광 산업 발전 추진

- 2019년 1월 우즈베키스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령을 발표 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관광 발전 구상 2019~25’ 발표를 통해 관광목적 사증 면제 대상국 확대, 관광 산업 관련 기업 활동 지원, 관광 인력 양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말까지 1,508개의 호텔을 설립하는 등 숙박시설 신축 및 개보수와 교통망 정비, 외국 항공사 취항 유치 등을 추진 하고자 함.

□ 경제특구 정책 적극 추진

- 2008년 최초로 경제특구를 지정하였으며, 2019년 3월 말 기준 21개의 산업, 제약, 농어업, 관광 경제특구가 운영되고 있음.

- (산업 경제특구) 2008년 이후 10개의 산업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2017년 이후 7개를 지정하며 최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약 경제특구) 2017년 5월 제약 분야를 대상으로 누쿠스, 조민, 보이순, 코손소이, 시르다리아, 부소톤릭, 파르켄트 등 7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에는 안디잔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음.
- (농·어업, 관광 경제특구) 2018년에는 부하라 농업 특구, 수산물 가공 특구, 차르박 관광 특구 등 농어업, 관광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산업 경제특구 현황(2019년 3월 말 기준)

명칭	주요 투자 유치 부문	운영 개시일	면적 (헥타르)	가동 기업	특징
나보이	제조업	2008.12월	564 (배후단지 121)	17개	한국 기업 유치
안그렌	제조업(화학, 석유화학), 건축자재, 첨단산업	2012.4월	1,638 (물류센터 36.7)	21개	타슈켄트에 대한 소비재 공급
지작	첨단산업, 가축, 식료	2013.3월	524	15개	중국 기업 유치
우르곳	기계, 자동차, 과일가공	2017.1월	42	(10개)	기존의 산업단지
기지 두반	섬유, 건축자재, 광물, 과일가공	2017.1월	67.5	(18개)	부하라, 나보이 인근
코간드	전자부품, 기계, 제약, 섬유, 농산물 가공, 플라스틱 제품, 가축	2017.1월	709.3		키르기즈와의 국경지역

명칭	주요 투자 유치 부문	운영 개시일	면적 (헥타르)	가동 기업	특징
하자 로습	섬유, 건축자재, 식료, 화학, 제약	2017.1월	406.8	-	-
시르다 리야	광물 가공, 농산물 가공, 섬유	2018.4월	-	-	-
나망간	과일, 채소, 섬유, 가죽, 기계, 건축자재	2018.8월	-	-	-
테르 메즈	운송 및 물류	2018.9월	3,000	-	아프가니스 탄과의 교역 및 운송물류

* () 안은 가동 준비 중.

출처: <https://sez.gov.uz/ru>,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우즈베키스탄 주요 산업 경제특구 위치



출처: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특구 현황 및 한-우즈베크 경제협력 방안』, 2018년, p. 16.

IV.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낮은 자유도 기록

○ 201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 87.8%, 득표율 88.6%의 높은 지지율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선출되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후계구도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안정을 토대로 개혁과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자유화 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18년 우즈베키스탄의 자유화 지수는 전 세계 180개국 중 140위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순위는 2015년의 160위 (178개국 대상)에 비해서는 상승된 것이나,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순위임. (카자흐스탄 59위, 키르기즈 79위, 타지키스탄 122위, 투르크메니스탄 164위)

- 자유화 지수의 세부 평가항목에서는 법률체계나 재산권 보호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2. 사회동향

- 2018년 평균 명목임금은 225달러로 전년대비 25% 상승하였음.
 - 직종에서는 은행 및 보험, IT, 통신 분야가 약 432달러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 338달러, 건설 284달러 등임.
- 2018년 기준 9.3%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이 17%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카쉬카다리야, 사라르칸트, 페르가나 지역이 9.7%로 가장 높고, 수도인 타슈켄트가 가장 낮은 7.9%를 기록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통관, 운송, 에너지 등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과의 새로운 통관 지역 설치, 키르기스와의 국경 획정, 타지키스탄과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전력 수출 재개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추진 중임.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 중국을 연결하는 도로가 2018년 2월 개통되어 화물 운송시간이 기존의 8~1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

되었으며, 향후 동일 구간에 대한 철도 건설도 추진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중국 도로



출처: <http://kabar.kg> 2018.01.27.

□ 러시아와의 협력 지속

- 러시아와의 정치 및 제도적 협력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나, 경제 협력은 긴밀히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 및 안보 협력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나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 대신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의 석유기업 Lukoil은 칸덤 등 4개의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3개의 가스전에서 탐사를 계획하고 있음.

- 전체 해외인력 송금액의 약 80%가 러시아로부터 송금되고 있으며, 나머지 20%가 카자흐스탄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송금임. (2017년 기준 해외노동인력의 송금은 GDP의 9.6%)



출처: Fitch Ratings

□ 중국과의 협력 확대 및 일대일로 참여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은 2018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전체 교역의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교역국임.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스 수출 및 제조업 제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규모는 2015년 15억 m³에서 2018년에는 34억 m³로 증가 추세임.

□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적극 추진

- 이슬람권인 UAE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2019년 3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는 100억 달러 규모의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음.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펀드와 아부다비개발펀드 간에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설립이 합의 되었으며, 공동 에너지 탐사 및 채굴, 가공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음.
 - 주요 추진 프로젝트로는 UAE 기업의 특구 투자와 탈리마잔 화력 발전소 등의 현대화, 시르다리아 암모니아 공장 건설 등이 있음.

□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

- 미국 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전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2010년부터 실시해 온 우즈베키스탄 면화 구매 제한 조치를 해제하였음.
 - 미국은 강제 아동노동을 통한 목화 채취를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면화 구매를 제한하였으며, 2018년 9월 제한을 해제하여 향후 정부기관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면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그동안 구입을 꺼렸던 미국 민간 기업들도 면화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Epsilon Development사는 5개의 가스전 개발 사업에 20억 달러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
- 독일 기업의 진출 확대, 프랑스와 금융 협력 등이 진행되고 있음.
 - 독일 공항 컨설팅기업이 타슈켄트 신공항의 건설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Siemens는 화력발전소 현대화, 변압기 공장 현대화 등의 사업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10월 우즈베키스탄과 프랑스의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전대차관 제공, 부하라 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원, 섬유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음.

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ECA 여신 잔액은 20억 5,310만 달러

- 2018년 9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4억 1,410만 달러, 중장기 16억 3,900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임.(중장기 여신 가운데 50만 달러 연체)

2. 국제시장평가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19.02)	6등급(2018.01)
Moody's	B1 (2019.02)	
Fitch	BB-(2018.12)	

-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으며, 국제금융 시장에서 채권발행에 성공
 - 2018년 12월 Fitch로부터 신용등급 BB-를 부여받았으며, 2019년 2월에는 Moody's로부터 B1 등급을 부여받음.
 - 2019년 2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10억 달러 규모(5년 만기 5억 달러, 10년 만기 5억 달러)의 첫 국채발행에 성공함.

VI. 종합의견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개혁 및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외환자유화, 통계 시스템 개편 등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 WTO 가입 등 개방정책을 통해 대외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적 요인과 경상 수지 적자 전환 등 대내적 요인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이는 외채 관련 지표들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미르지요에프 대통령 집권 이후 국내에서는 정치 및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중양아시아 국가들과 국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주요 국제신용평가 3사로부터 처음으로 국제신용등급을 부여받았으며, 2019년 2월에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한국의 개발협력」 원고 기고

□ 발간 목적

- 「한국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원고 집필 요령

- 내용 및 작성 : 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 형식으로 작성
- 형식 : 한글파일 사용 (13 포인트, 200자 원고지기준)
-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E-MAIL : sjo@koreaexim.go.kr / jiwonlee@koreaexim.go.kr

Tel : 02-3779-6583

- 기고 원고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기고 원고는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 심사 절차는 한국의 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원고의 심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원고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게재

-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하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는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ttp://www.edcfkorea.go.kr>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